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1호)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10. 25

##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 요약 본 >

2010. 10. 25

##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직후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의 원조공여국으로 도약

○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적 성공사례이자,  
21세기 개도국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

◇ 이제는 그동안의 국제사회 도움에 보답하는 한편,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필요

“우리는 G20 의장국이자,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재난구호, 빈곤과 저개발, 평화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0.2.17, 대통령님 아이티 재건지원단 환송사)

◇ 과거 수원경험을 거울삼아, 단순한 물질적 시혜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협력방식을 창출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원조를 받아본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과 경험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원조는 한손으로 주지말고 두손으로 줘야 합니다” (‘09.12.31, 대통령님, 외교안보 연두업무보고)

⇒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시점에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ODA 국가전략』을 수립



## 목 차

I.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	7
II.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주소 .....	8
III.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11
IV.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	16
1.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16
2.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19
3. 국제활동 참여 강화 .....	25
V.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 .....	29
VI. 향후 조치계획 .....	32





# I

##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안보, 경제, 환경, 빈곤문제 등이 地球村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도 변화
  - 富國의 시혜 ⇒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
  - 단순한 원조 ⇒ 개도국 발전을 위한 개발(Development)
- 2000년대 들어 MDGs가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최상위 목표로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를 전개

###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01.9월 189개국 정부대표가 채택한 목표로서 '15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

- (More Aid) 원조 규모 확대 논의
  - 국가별 원조규모 확대(GNI대비 0.7%),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항공권 연대기여금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등)
- (Better Aid)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 ① 로마선언(HLF-1): 수원국-공여국간 정책·절차·관행 조화에 중점
  - ② 파리선언(HLF-2): 효과성제고를 위한 5대 원칙, 12개 성과지표를 채택
  - ③ 아크라행동계획(HLF-3): 파리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 ※ HLF-4는 한국에서 개최('11.11월)
- (Aid Architecture) 원조주체의 확대\*에 따른 원조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극복하기 위한 조화와 협력을 추구
  - \* 120여개 국제기구, 50여개 공여국, 기타 민간공여기관이 존재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적절히 수용하여 국제 규범에 맞게 원조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

## 1. 개발협력 역사

### 1) ODA 수원국으로서의 한국

- ☐ (수원규모) 그 동안 총 수원규모는 약 **120억불**이며, 기술·자본재·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원조를 받음

\* KIST, 국립의료원 등 국가기간시설에 집중 활용

-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

- ☐ (원조활용) 원조의 덫(**Aid Trap**)을 피해 경제사회 개발의 촉진제로 원조를 활용한 모범사례

### 2) ODA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 ☐ (공여규모) 그 동안 총 원조규모는 약 **69억불**(87년~09년)이며,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68%)

- USAID 자금으로 개도국 초청연수(63년)를 처음 시작하고, 70년대는 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소규모로 추진

- **EDCF**(87년), **KOICA**(91년) 탄생으로 대외 원조의 기본 틀을 갖추고 **90년대부터 대외원조를 본격화**

- '03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 지원, MDB 출연·출자 증가 등으로 유무상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

- ☐ (공여효과) 개도국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으나, 적은 원조규모, 짧은 원조역사로 인해 국제수준에는 미흡

## 2. 개발협력 실태(2000년대)

- (추진체계) 다원화된 추진체계하에서 유상과 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 (유상)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대외경제협력 촉진(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 경제·사회발전 증진(한국국제협력단법)

### < ODA 담당기관 및 관련법 현황 >

ODA 형태		담 당 기 관	비 고
양자원조	유상원조	기획재정부(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원조	외교부(KOICA), 30개 기관	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및 개별기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금년 7.26에 시행

- (원조규모) '00~'09년까지 총 원조 규모는 **51억불** 상당이며, '00년 **2.1억불** → '09년 **8.2억불**로 약 **4배** 증가

- 양자원조 : 총 **35억불** 규모(유상 37%, 무상 63%)

\* 03년부터 무상비율이 50% 초과

- 다자원조 : 총 **16억불** 규모(국제금융기구 70%, UN과 기타 기구 30%)

- (원조구성)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사업형태별로는 프로젝트가 중심

- 아시아(**68.3%**), 아프리카(11.7%) 중남미(7.5%), 기타지역(12.5%) 순

- 무상원조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41.6%), 기술협력(38.5%), 인도적 지원(6.4%), NGO 지원(2.1%) 순이며 유상원조는 모두 프로젝트(100%)

### 3. 개발협력 특성 및 평가

#### □ OECD DAC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특성(09년)

- 적은 원조규모와 낮은 GNI 대비 비율(09년) : 8.2억불(0.1%)
  - \* ODA 규모는 DAC 회원국중 19위, GNI 대비 비율은 최하위
- 높은 유상비율(08년) : 우리나라(36.3%) vs DAC 회원국(12.6%)
  - \* '08년 총지출 기준 DAC 회원국 중 3위(일본 47.2%, 포르투갈 37.5% 등)
- H/W 중심의 사업(08년) : 우리나라(18.9%) vs DAC 회원국(6.8%)
  - \* H/W 사업 : 도로, 교량, 병원 등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 낮은 비구속성 비율(08년) : 우리나라(35.8%) vs DAC 회원국(86.5%)
- 유무상 담당기관 분리 : 각각의 법적기반과 추진체계 보유
  - \* 유상원조를 실시 중인 8개 DAC 회원국 중 유무상기관이 분리된 국가는 프랑스(시행기관은 통합), 이태리, 한국

####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 유상과 무상이 상호 연계 없이 ODA를 추진하여 사업 분절화와 중복 발생
- 원조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전략이 미흡
-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흡, 전문인력 미확보, NGO·기업과의 연계 부족 등 추진기반이 취약

☞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ODA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

## 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

세계최초로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독특한 특성을 보유

- (국내 환경) 선진국과 차별화 되면서도 개도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특유의 **ODA** 잠재력을 보유
  - 농업중심에서 산업화·정보화 단계를 거쳐 단기간내 빈곤을 탈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만의 발전경험을 보유
  - 개도국과 유사한 식민지 독립과 전쟁경험이 있어 ODA 과정에서 심리적 동질감과 신뢰감 형성이 용이
  - 다만, 짧은 역사로 인하여 추진체계가 분산되고,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
- (국제 환경) G20 정상회의('10.11), HLF-4('11.11)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위상 제고
  - 우리의 발전모델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
  -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개발협력을 향한 초기 진입단계에 있어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를 위해서는 압축적인 개발전략이 필요
  - 각 국가의 개발협력에 대한 시각과 철학 차이

\* 최근 Obama 행정부는 자국의 안보 이익과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개발 협력을 외교정책의 중요분야로 삼을 것을 천명(10.9 UN MDGs 정상회의)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수원국 개발수요와  
우리의 특성 결합

국가전략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추진

두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OECD DAC 회원국 / ODA 규모 및 비율 / 통합체제 구축**

##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개발경험 분야
  - 개발경험 정리
  - 정책 컨설팅
- 사업기술 분야
  - 경쟁력기술(ICT, 농업 등)
  -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 감성 분야
  - 감동사례 발굴·공유
  - 한국적 미와 정감

### 원조 시스템 효과적 개편

- 국가전략 부문
  - 지역별 기초
  - 중점협력국, 통합 CAS
- 사업수행 부문
  - 사업발굴 및 선정
  -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 수원국과 협력 강화
- 평가 부문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의 평가결과
  - 환류

### 국제 활동 강화

-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 다자원조 전략
  - 선진공여국 협력
- 국제기구 참여확대
  -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 ODA 조달시장 참여
- 국제규범 준수
  - 국제규범 형성 참여
- 인도적 지원 강화

**원조 소외국(1개)을 선정, 총체적 접근을 통한 개발협력의 성공사례 도출**

##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의 확대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전문인력 양성**

## 2.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 (기본정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기본정신\*의 틀 안에서 3대 가치를 지향

\*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① '수원국에 희망을' ⇒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자립에 중점

\*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립능력 개발에 초점

② '국제사회에 모범을'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

\* 인도주의, 인권, 빈곤퇴치 등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③ '국민에게 자긍심을' ⇒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 국민들의 자부심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활용

□ (추진방식) 우리의 개발경험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

① 수원국이 원하는 원조분야·사업을 우리의 강점·노하우와 결합할 수 있는 원조

② 국가전략에 따라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통합적 차원의 원조

③ 수원국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도움받던 때의 경험을 떠올려 진정성을 담아 두 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 3.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우리나라 ODA의 큰 틀인 ▲ OECD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 ODA 규모와 비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추진체계를 조화롭게 설계

#### □ (OECD DAC 회원국) DAC 회원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

- 국제사회에서 정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새로운 규범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개발협력 추진

\* UN의 MDGs, OECD DAC의 권고 및 지침, 로마선언,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등

- '08년 OECD DAC 특별검토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을 착실하게 이행

#### < OECD DAC 특별권고사항 >

- ① (추진체계) 법적 기반 확립, 단일 원조기관 구성, 포괄적인 중기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제고 전략 시행
- ② (규모 및 배분방안) 원조확대 공약 이행, 유무상 통합 추진전략 시행, 통합 중점대상국 선정 및 다자원조 전략 수립을 통한 선택과 집중
- ③ (시행조직) 원조체계의 분절화 완화, 통합 CAS 활용, ODA 인력 전문성 강화,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 ④ (원조효과성) 수원국 체계 활용, 공여국간 원조조화 강화, 비구속성 비율 확대
- ⑤ (인도적 지원) 인도성 · 중립성 · 독립성 강화,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인도적 활동 강화, 다자원조채널 적극 활용



□ (ODA 규모와 비율) 국제기준 및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 ODA 규모 : '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

\* 09년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0.1%)은 DAC 회원국(평균 0.31%) 중 최하위 수준

○ 양·다자간 비율 : '15년까지 70:30 수준으로 유지

\* OECD DAC 다자 평균 26%, 우리나라 31.3% (08년 기준)

○ 유·무상 비율 : '15년까지 40:60 내외\*로 유지(순지출 기준)

\* OECD DAC 유상 평균 12.6%, 우리나라 36% (08년, 총지출 기준)

○ 비구속성 비율 : '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

\* 유상 50%, 무상 100% \* OECD DAC 평균 86.5%

< 연차별 GNI 대비 ODA 비율 >

연도별	'09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 (통합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중심의 유무상 통합추진체계를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ODA 정책 및 사업을 조정

○ 국가차원의 전략에 따라 유무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한 집행과정의 조율 기능 강화

- 유상(재정부)·무상(외교부)별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 유상·무상별 관계기관 협의체 및 현지 재외공관 협의체 구성·운영

○ ODA 평가·홍보·통계관리는 유무상 통합적으로 시행

## 1.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① 추진 필요성

◇ 선진국과 차별되며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 (개발경험) 한국은 선진국과 차별화 되면서 **ODA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 보유**

-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보고 있으며, 국제기구나 전문가들도 개발경험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

\* 에콰도르, 볼리비아, 탄자니아 등 : 한국은 벤치마킹 대상

\* 세계적 석학 Jeffrey Sachs 교수 : 한국개발경험은 ODA의 바람직한 모델

□ (추진현황) 재정부는 KSP 사업(정책자문+개발경험정리)을, 교과부·복지부 등은 소관 분야별 원조모델 개발을, 출연연은 자체적으로 개발경험정리를 추진

- 기관별 중복방지와 정보공유, 실제 ODA 사업에의 활용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
- 과거 개발경험 이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한 특유의 기술이 담긴 사업·기술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필요

☞ ① 한국적 특성이 담긴 高품질의 원조 ② 수원국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

## ② 개발협력 콘텐츠 구성

◇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 마련

□ (개발경험)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우수한 정책·제도로써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 ⇒ 정책 컨설팅에 활용

\* 경제개발계획, 수출진흥 정책, 경제위기 극복경험 등

○ 원조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정리

\* 경제(재정부), 보건의료(복지부), 인적자원(교과·고용부), 행정·ICT(행안·법무·방통·지경부), 농어업(농식품·행안부), 국토건설(국토부), 산업에너지(지경부), 환경(환경부)

\* 저탄소 녹색성장, 여성, 인권 등은 汎분야(cross-cutting)로 관리

□ (사업기술)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업기술로서 개도국에 효과가 큰 ODA 사업목록(**Inventory**) ⇒ 프로젝트, 기술협력에 활용

\* 농산물 재배기술, 전자정부 시스템, 전력망 구축기술 등

○ 8대 분야를 포함하여, **쏠부처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발굴·정리

\* KOICA와 EDCF도 그동안의 원조사업경험을 토대로 자체정리

□ (감성분야) 특유의 한국적 감성 또는 美를 가미하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감동사례 ⇒ **ODA 부가가치 제고**에 활용

○ 문화부(한국적 감성과 미), KOICA/EDCF(감동사례)

⇒ 개발경험 + 사업기술 + 감성분야 ⇨ 『표준 원조모델』 마련

\* 3가지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 실정에 맞게 신축적 보완·활용

### ③ 단계별 구축방안

◇ 분야별로 총괄기관을 지정하되 소관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원조수요가 많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 (총체적 개발경험정리) 한국의 발전모델자체에 관심이 많은 개도국 최고위급 인사에게 우리의 개발경험을 총체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도록 개발경험 전반을 정리

○ 개도국의 수요에 맞게 영어·불어·서반아어로 번역하고, 직접 브리핑하거나 또는 DVD 형태로 제작(1시간 분량)

\* 경제성장과정, 새마을 운동, 인적자원 개발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

□ (분야별 콘텐츠 개발) 분야별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가이드 라인과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의 품질 제고

○ 개발경험 : 재정부가 총괄하고 부처·출연연과 함께 중복이 없도록 추진

\* 관계부처 참여하에 KSP 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12년까지 100개과제 정리)

○ 사업기술 : 외교부가 총괄하고 부처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감성분야 : 외교부·문화부를 총괄기관으로 하여 콘텐츠 개발

\* 외교부(KOICA) : 유무상 감동적인 ODA 사례 등

문화부 : 원조과정에서 한국적 감성과 美의 반영방안

\* 사업기술, 감성분야는 관계부처 참여하에 무상원조 협의회를 통해 추진

□ (원조모델 개발) 외교부·재정부 합동으로 3개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점차 확대

\* 새마을 운동(농촌종합개발),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자보건 사업

⇒ 분야별 세부계획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2.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① 추진 필요성

◇ 다원화된 추진체계 하에 유무상 기관이 별도의 원조전략 ➡ 사업수행 ➡ 평가를 추진하여 국가차원에서 비효율성 야기

- (유무상전략) 유무상 기관별 원조전략은 있으나 이를 종합·조율하는 국가차원의 원조전략 수립체제 미비
  - 지역별 정책기조, 중점협력국, 국가지원전략(CAS) 등 핵심 전략이 기관별로 분리되어 운영중
- (사업수행체계) 유무상 기관들이 상호 협의 없이 자체 사업수행체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와 현장에서의 사업조율 문제가 발생
  - 사업발굴과 사업선정 과정에서 유무상 기관간 연계 부족
  - 원조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연계사업\* 미흡
    - \* 유무상 연계, 정부/NGO·기업간 연계, 패키지형 사업 등
  - 수원국과의 개별접촉으로 인해 협의 창구가 다원화 되고, 수원국 중심의 원조체계 미비
- (평가시스템) 유무상 개별기관에서 각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객관성이 부족하고 평가사각지대 발생
  - 유무상 연계영역에 대한 평가사례가 없고, 평가결과 미공개로 인한 책임성과 국민적 지지 확보 곤란

☞ 일련의 유무상 원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필요

## ②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방안

### 1) 유무상 통합전략 수립

◇ 유무상을 통합한 지역별 정책기조 ⇨ 중점협력국 선정 ⇨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

□ (지역별 정책기조) 유무상 통합 지역별 정책기조를 설정, 체계적 원조의 틀 마련(기본계획 수립주기(5년)에 따라 재검토)

○ 아시아 :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 유지 (양자원조 55%내외)

\* 신아시아 외교구상('09.3),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08.7)

○ 아프리카 : 빈곤감축과 자립기반 확대에 중점 (양자원조 20%내외)

\* 한-아프리카 포럼(09.11) : 12년까지 지원규모를 08년 대비 2배 확대

○ 중남미 : 우리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 (양자원조 10%내외)

○ 중동·CIS : 분쟁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 (양자원조 10%내외)

○ 오세아니아 등 : 원조소외국을 통한 성공모델 구축 (양자원조 5%내외)

□ (통합중점협력국) 유무상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을 26개국으로 통합, 양자예산의 70%이상을 집중

\*\* 3년마다 재검토. 3년 이내라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가능

○ OECD DAC 수원국(152개국) 중 중하위소득국 이하 그룹에서 국제적인 기준, 원조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원조소외국 지원 : 우리나라 ODA 선진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개발협력의 성공모델 마련

- 국제적으로 원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가(Aid Orphans) 중 국민소득, 수원환경, 발전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국가의 대외공개여부는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검토

□ (통합 **CAS**) 유·무상 기관별로 수립했던 국별지원전략(**CAS**)을 통합작성하여 국가차원의 **ODA** 지원 기본지침으로 활용

○ '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의 개발계획 수립시기와 연계하여 통합 CAS 수립을 완료하고 3년 주기로 보완

- 금년 중 3개국에 대해 통합 **CAS** 수립에 착수(재정부(EDCF) · 외교부(KOICA) 합동 전담팀 구성)

\* 금년 총리실 중심으로 1개국을 선정, 모범사례가 되는 통합 CAS 작성

○ 총리실에서 **CAS**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수립과정에서 **CAS** 초안을 공개하여 충실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원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

\* 세계은행, ADB는 CAS 관련문서를 공개하며, 영국, 일본도 초안 공개

## 2)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 ◇ 사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수원국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 (\* 부처, EDCF, KOICA, NGO, 기업 등)
-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방안 강구**
  - \* 원조사업 : 개발조사·개발경험,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 \* 사업간 연계 : 유무상 연계, 정부/NGO·기업, 패키지형 연계

□ (사업발굴 및 선정절차) 유상(재정부)·무상(외교부)간 **충분한 협의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사업발굴 : 현장중심의 상시적인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 유무상 기관간 사업발굴 협의를 정례화하고, CAS에 근거하여 유무상 통합중점분야를 선정한 후 수원국과 정책협의 실시
- 사업발굴 예산을 확대하고 **KOICA와 EDCF의 현장인력을 대폭 확충**
- 관계부처, 봉사단, NGO, 연구소 등이 사업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검토, 예비사업 리스트 마련

○ 사업선정 : 관계부처간 충분한 사업검토 후 선정

- 유상부문은 주요 후보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강화
- 무상부문은 KOICA 및 개별부처 사업안이 확정되기 전에 주관기관 및 관계부처 간 사전 검토를 강화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원조기관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

### 《 원조사업별 추진방안 》

- 개발조사, 개발경험공유 : 개발협력 콘텐츠 전수에 적합하며, 후속 ODA 사업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 사업비중 확대
- 프로젝트 : 사업종료 후 사업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여부를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설정
- 초청연수 : 외교부가 KOICA와 각부처 연수가 중복되지 않게 총괄·기획하되 초청경로는 재외공관으로 일원화
- 봉사단파견 : 각 부처별 해외봉사단 사업예산을 KOICA의 **World Friends Korea** 사업예산으로 통합 운영

### 《 원조사업간 연계 강화 》

- 유상-무상 연계 : 연계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① 개발조사/KSP(무상) + 프로젝트(유상) ② 프로젝트(유상) + 사업운영(무상)  
③ 지역내 인프라(유상) + 사회교육 시설(무상) ④ 역량강화사업(무상) + 인프라(유상)

\* 지금까지 유무상 연계사업은 22건이나 초기부터 계획된 사업은 없음

- 정부-민간(NGO/기업) 연계 : 연계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① 자금지원(정부) + 사업수행(NGO) ② 프로젝트(정부) + 운영(NGO)  
③ 타당성 조사(정부) + 프로젝트(기업) ④ 차관(EDCF) + 출자(기업)

- 패키지형 사업 : 중점분야의 목표 달성, 특정지역의 종합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 추진

< 중점지원분야(예시) >

- (목표) 농가소득증대
- (사업) 타당성조사 + 원조사업의 연계(인프라 : 관개수로, 가공시설 + 기술전수 :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 기자재지원 : 농기계) + 사후관리 : 유지보수, 판로개척 등)

< 중점지역 선정(예시) >

- (목표) 마을주민의 인간개발지수 향상
- (사업) 소득증대(농업, 새마을 운동) + 교육(초등학교 건립, 교과서 등) + 의료(보건소 건립) + 전력(태양광발전 등)

\* 이 과정에서 부처의 전문성과 원조집행기관(KOICA/EDCF)의 노하우·현장경험을 결합하여 추진

□ (수원국과 협력 강화) 개별부처가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수원국 접촉창구의 혼란 방지

- 예측가능성 제고 : 3년 단위의 지원계획(Rolling Plan)을 시범적으로 마련하여 수원국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 수원국 자립기반 마련 : 수원국의 주인의식 자립방안 마련

### 3) 통합평가 시스템 도입

□ 유무상별로 진행된 자체평가 방식의 평가시스템을 총리실 평가소위 중심의 유무상 통합평가 방식으로 개편, 객관성 확보

\*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평가소위 구성, 통합평가지침 제정('09)

- 평가소위에서 민관합동으로 유무상 연계영역에 대해 직접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별 자체평가결과를 심의

\* 금년 평가사업 : 국별평가(캄보디아), 유무상 연계실태, 새마을 운동

□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제도화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 3. 국제활동 참여 강화

#### ① 추진 필요성

◇ G20 의장국, OECD DAC 회원국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ODA 분야에서의 국제협력활동이 미흡한 상황

- 우리의 ODA를 구성하는 양 축의 하나인 다자원조도 추진 체계의 분산으로 국가차원의 통합전략이 부재
  - 선진 ODA 기법의 습득에 효과적인 선진공여국과의 **ODA 협력도 초기단계**
-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국민과 기업의 진출실적은 저조한 상황
  - 인력진출 : 17개 기구 139명(91년) ⇒ 50개 기구 343명(10년)
    - \* UN : 우리분담율(10년 2.26%,11위) 대비 전문직(P급)이상 진출규모 37위
    - \* 국제금융기구 : 우리평균 지분(1.48%)에 못 미치는 0.7% 수준
  - 기업진출 : **ODA 조달시장**에 수주실적도 미미한 수준
    - \* UN : 0.52억불(0.51%, 분담금 비중 2.1%)
    - \* 5대 국제금융기구 : 0.8억불(0.34%, 분담금 비중 1.48%)
-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국제원조 규범과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도적 지원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
  - UN, DAC, MDB 등 각종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
  - 해외재난 증가에 대비한 긴급구호 시스템 개편

☞ 달라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시행 필요

## ② 국제활동 참여 강화방안

### 1)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강화

- ◇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추진
- ◇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 및 원조분업을 활성화

- (다자원조 규모 및 구성) 다자지원 비율(30%)과 MDB에 대한 원조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UN** 등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다자지원 비율은 선진공여국과 유사하나, MDB 지원에 집중

- (다자원조 전략)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지원 규모·분야·방식 등을 포괄하는 다자원조 전략 수립
  - 중점분야 : 글로벌 차원의 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 양자 차원의 접근이 힘든 취약국가나 인도지원 분야 지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 : 신탁기금, MDB 협조융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 분담금 납부 : 의무분담금은 소관 부처, **ODA** 전액 계상 사업분담금은 다자원조 주관기관 중심으로 납부

- (선진공여국과 협력) 유무상 기관간 사전 조율을 통해 미국 등 선진공여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원조분업을 확대

\* 특히 우리의 비교우위분야와 지역에서 선진국과 공동협력사업 강화

##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ODA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대책을 추진

□ (인력 진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기구 진출수요에 발맞추어 국제기구에 우리 인력 진출을 확대

- 외교부(UN 등), 재정부(국제금융기구), 각부처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총리실에 관계부처 합동 T/F를 설치 운영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기여금 확대와 연계하여 진출 추진
- 국제기구 인턴 파견을 확대하고, 여성인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정례화

□ (기업 진출) 우리나라 ODA의 비구속성 비율 증가와 함께 국내 기업의 국제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 마련

- \* 국제기구(UN, MDB 등) 조달시장은 약 400억불 규모, OECD 국가 전체 ODA 구매시장 중 경쟁가능(contestable)한 시장은 약 667억불 규모
- ODA 조달을 해외조달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재정부(MDB), 외교부(UN),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간 역할 분담
-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ODA 조달시장 설명회 개최, 진출실적(Track Record) 축적, 조달정보 시스템, 지역별·분야별 매뉴얼 마련 등 추진
- 컨설팅 시장은 선진국이, 물품, 시공관련 시장은 중국·인도 등이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 특성을 살린 종합 방안 마련

### 3) 국제원조규범 준수와 형성과정에 참여

◇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원조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

□ (규범 준수) UN의 MDGs, OECD DAC의 권고 사항 등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을 충실히 이행

○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규범 이행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여 개선

□ (규범 형성) OECD DAC 회의, MDB 회의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회의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 수행

○ 내년 HLF-4에 대비, 외교부에 기획단을 설치하고 국제 개발협력(실무) 위원회를 통해 현안 사항 조율

### 4) 해외 긴급구호시스템 개편

◇ 국제사회 재난발생 빈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긴급구호 예산 및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1975-2005년간 자연재해는 연평균 100건에서 400건으로 4배증가(UN)

□ (긴급구호예산) ODA 중 긴급구호 예산 비중을 **15년까지 DAC 평균수준인 6%로 확대**(09년 긴급구호 예산 95억원, 0.87%)

□ (긴급구호시스템) 상황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구호대 파견여부와 초기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과 긴급구호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민관협력 강화

## 1. 국민적 공감대 확보

◇ DAC 가입과 ODA 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대하고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범정부 통합홍보체계)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어온 **홍보활동을 통합**하는 추진체계를 정립
  - 홍보계획 및 활동에 대한 조율·점검·조정, 홍보실적 평가 등 기능 수행
- (유무상 통합홍보)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KOICA 등에 **ODA 홍보대사 및 홍보단 구성·운영**
  - 한국 **ODA**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합 **BI**도입
  - 유무상 및 각 시행기관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통합 **ODA** 홈페이지(odakorea.go.kr)’ 구축 및 운영
- 대상별 맞춤형 홍보·교육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초중고) ODA 기본취지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글짓기, 견학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체험학습** 강화
  - (주요대학) **ODA**관련 교과과정, 단기캠프, 특강을 개설하고 정책간담회, 세미나 개최를 적극 지원
  - (일반국민) ODA 필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ODA 박람회, 홍보관 개설 등 참여프로그램 확충

##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NGO, 기업, 대학 등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증대되고 있으나 협력체계 미비로 인하여 민간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곤란

- **(NGO 협력)**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
  - 예산지원 및 보조금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NGO사업과 ODA의 연계를 위해 NGO 현황 및 사업에 대한 통계관리체제 구축
    - \* NGO 역량강화사업 등 협력사업비를 '15년까지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비율을 60%('10) ⇒ 80%('12)로 상향
  - 사업 발굴단계에서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ODA 전 과정에 걸쳐 **NGO**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민간기업 협력)** 기업이 개발협력의 주체이자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및 국제 NGO와 연계, 국제기구 참여 등을 통해 상생(**Win-Win**)관계 구축
  - PPP 사업 예산확대를 검토하고, **ODA**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 ODA 정책개발 및 사업발굴의 전문기관으로서 '**Think Tank**'로 활용
  - 대학 및 연구소별 전문분야·대상국가·거점지역 지정을 통해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ODA 관련 연구조사\*업무를 위탁
    - \* 개발경험의 정리와 전수, CAS 수립, 타당성 조사, 평가 등(개발컨설팅 산업의 확대)
  - 대학·연구소-NGO-정부기관(KOICA, EDCF 등)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이론과 실재가 결합된 연구성과 도출 유도



### 3. ODA 전문인력 양성

◇ ODA 규모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체계적 전문 인력 관리 미흡

- 국별 전문가, 분야별 컨설턴트, 해외경험자(봉사단 및 파견자) 등 체계적인 인력 **Pool** 구축하고 그룹별 양성방안 마련
  - (국별전문가) 연구기관, 대학의 지역연구, 민간기관, NGO 등을 연계하여 연구 활성화
  - (컨설턴트) 개발 및 타당성조사, 개발경험 전수, 사업실행, 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
  - (학 생) 국제대학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되, World Friends Korea, 인턴제도 등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실시
  - (퇴직자) 퇴직자에 대한 분야별 pool을 구축하고, ODA 교육 등을 거쳐, 기술협력·정책자문요원으로 활용
-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NGO, 기업 등 **ODA**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유관기관과 교류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국내 컨설팅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수요창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ODA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모색
  - 컨설팅 분야를 활성화하여 ODA 경험이 축적되도록 지원

**① 금년중 분야별 계획 수립·추진**

- ☐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유상(재정부), 무상(외교부) 분야별 기본계획(5년단위)을 수립
-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유상(재정부), 무상(외교부) 분야별 시행계획(1년단위)을 수립

**② 내년부터 『ODA 선진화 방안』을 본격 추진**

- ☐ 내년부터 ODA 각종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이견사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율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 원 본 >

2010. 10. 25

##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 목 차

<b>I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동향</b>	<b>39</b>
<b>1</b> 새로운 국제환경에서의 개발협력	41
<b>2</b> 2000년대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42
<b>3</b>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45
<b>II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주소</b>	<b>47</b>
<b>1</b>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49
<b>2</b> 국제개발협력 현황[2000~2009]	51
<b>III .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b>	<b>57</b>
<b>1</b>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SWOT)	59
<b>2</b>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60
<b>3</b>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63

# 목 차

## IV.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 67

**1**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69

**2**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79

**3** 국제활동 참여 강화 ..... 99

## V.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 ..... 111

**1** 국민적 공감대 확보 ..... 113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115

**3** ODA 전문인력 양성 ..... 119

## VI. 향후 조치계획 ..... 123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직후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의 원조공여국으로 도약

○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적 성공사례이자,  
21세기 개도국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

◇ 이제는 그동안의 국제사회 도움에 보답하는 한편,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필요

“우리는 G20 의장국이자,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재난구호, 빈곤과 저개발, 평화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0.2.17, 대통령님 아이티 재건지원단 환송사)

◇ 과거 수원경험을 거울삼아, 단순한 물질적 시혜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협력방식을 창출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원조를 받아본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과 경험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원조는 한손으로 주지말고 두손으로 줘야 합니다” (‘09.12.31, 대통령님, 외교안보 연두업무보고)

⇒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시점에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ODA 국가전략』을 수립





---

# I.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동향

---

**1** 새로운 국제환경에서의 개발협력

**2** 2000년대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3**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세계화 시대의 국제환경에서는 안보, 경제, 환경 문제 등이 쏠지구적 성격을 내포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범위도 함께 변화
  - 富國의 책무이행을 넘어 기후변화 공동대응, 질병퇴치, 국제 평화 증진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로 인식
  - 단순한 원조(Aid)에서 인적자원, 거버넌스, 환경, 무역, 투자, 금융 등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통합적 협력에 초점을 둔 개발(Development) 이슈로 범위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40년대) 마셜플랜을 통한 유럽 재건 지원
- ('50년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적 차원(동서문제)
- ('60년대)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남북문제)
- ('70년대) 빈곤해소 등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강조
- ('80년대) 신자유주의에 따라 선진국 모델에 따른 구조조정과 개혁에 중점
- ('90년대) 냉전종식과 함께 세계화가 도래하면서 원조피로현상이 나타나고,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환경 등)이 강조
- ('00년대) UN의 MDGs를 계기로 빈곤감축이 중심주제로 등장하고 원조규모 확대, 원조의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 확대

## 새천년개발목표(MDGs)

- ◇ MDGs는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 개발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상위 목표이자 계획
- ◇ MDGs는 범세계적 이슈를 종합하여 '15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

\*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남녀평등 및 여성권의 향상 ④ 아동사망을 감소 ⑤ 모성보건 향상 ⑥ HIV/AIDS·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1. 원조규모 확대(More Aid)

- '02년 '몬테레이 UN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에서 원조규모를 GNI 대비 0.7%까지 확대키로 하고 다양한 재원대책\*을 논의

\* 개발재원은 원조자금외에 개도국내 자원, 민간투자자와 무역, 외채탕감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확충되어야 함을 명시

- 이어 '05년 '글레이클스 G8 정상회의'에서 '10년까지 GNI대비 0.36% 달성을 위해 1,300억불(04년 불변가격)로 확대키로 결정
- 아울러 기존 방식으로는 MDGs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논의를 전개 중

\* '06년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이 출범, 항공권연대 기여금, 국제개발 채권, 탄소세, 외환거래세, 국제복권 등에 대하여 논의 진행중

□ 최근 국제사회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개

○ **OECD**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공여국의 원조 공약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속 재확인(09.5월)

\* '09년 DAC회원국의 명목 ODA는 2.2% 감소, 실질 ODA는 0.7% 증가

○ 세계은행은 08.7월 이후 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1,050억불 재정기여를 공약하는 등 **MDB도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

\* IMF/WB는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2015년까지 5300만명 추가 극빈층 발생, 극빈층(하루 1.25달러 미만 생활 인구)은 총 9억2천만명 예상

## 2. 원조 효과성 제고(Better Aid)

□ (로마선언) 03년 HLF-1에서 수원국 시스템과 공여국의 정책·절차·관행 조화를 위한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 발표

○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한 개발원조, 협력대상국의 주도적 역할, 원조관련 공여국 절차와 이행 간소화 등을 천명

\* 동 원칙들은 파리선언을 통해 5대 원칙으로 체계화

□ (파리선언) 05년 HLF-2에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발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가지 핵심원칙\***을 채택

\*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 ② 수원국 개발전략 및 체제와의 일치, ③ 공여국간 원조조화, ④ 성과중심 관리 ⑤ 상호책임성 추구

○ 아울러, 각 국가의 파리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12가지 원조효과성 성과지표**를 제시

- (아크라 행동계획) '08년 HLF-3에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
  - 원조의 예측성, 수원국 체제 활용, 수원국의 주체성을 높이도록 원조 조건(conditionality) 완화, 원조 비구속화 확대 등
  - 아울러, 전통적인 양자간, 다자간 공여자 외에 글로벌 펀드, 시민사회,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조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HLF-4는 한국에서 개최('11.11월)

### 3. 글로벌 원조체제(Aid Architecture)의 변화

- 국제사회 개발협력은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여주체\*가 증가하고, 신흥공여국·글로벌펀드 등으로 다양화
  - \* '06년 기준, 225개 양자 원조기관, 242개 다자기구(24개 개발은행, 40여개 UN기구 포함) 존재(DAC 2009 개발협력 보고서)
  - 원조규모 확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에 기여하였으나, 원조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심화
    - \* 국제원조체제에서 DAC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공여자의 지속 증가로 인해 DAC이 가지는 집단적 규제능력 감소
- 이에 따라, 개발협력커뮤니티는 다양한 개발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을 경주
  - \* 신흥공여국, 글로벌펀드, 민간기구, 시민단체 등
  - UN은 'Delivering as One' 모토로 **"One UN 프로그램"** 도입(06.11월)
  - MDB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 추진
  - 신흥공여국에 대한 DAC의 outreach 활동 강화 등

◇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의 목표와 규모, 효과성, 원조 체제 변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

- (목표와 규모) 국제사회는 **MDGs**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
  - 우리도 MDGs 등 국제협력 목표를 공유하고, 원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필요
- (원조효과성) 국제사회는 원조규모에 비해 낮은 성과에 직면하면서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집중
  - \* 이 과정에서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등 최근 주요 이슈가 파생
  - 우리도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하에 독특한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기여할 필요
- (협력과 조화) 국제사회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모든 주체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조
  - 우리도 글로벌 원조체제 다원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노력에 동참할 필요
  - 특히, 국제개발협력 논의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둘 필요





---

## Ⅱ.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주소

---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국제개발협력 현황(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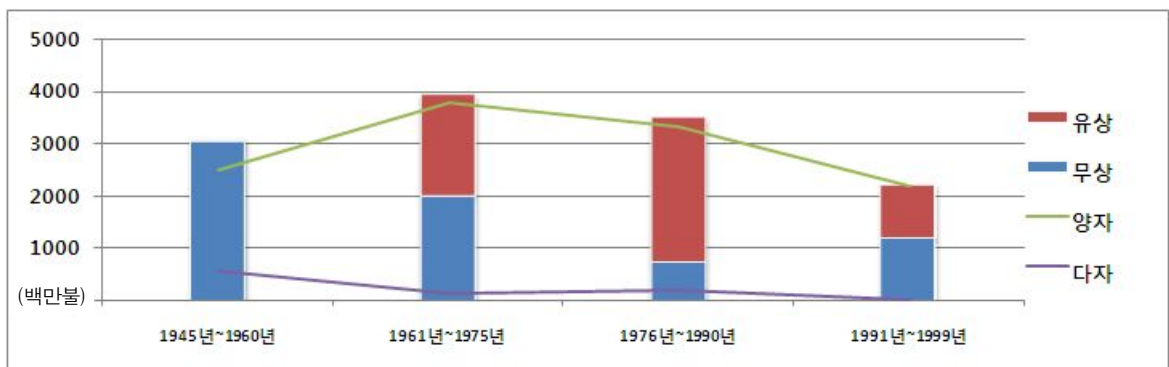
## 1. ODA 수원국으로서의 한국

□ (수원규모) 해방 직후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후복구사업을 계기로 본격화

○ 그 동안 총 수원규모는 약 **120억불\***이며 이중 100억불 이상을 미국과 일본이 지원

\* 유상 : 무상 비율은 약 45 : 55, 양자 : 다자 비율은 약 92 : 8

○ 기술·자본재·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조를 받았으며, 채무구제가 없었다는 점이 특징



□ (원조활용) 강한 발전의지와 주인의식을 갖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전후복구와 경제사회개발에 해외원조를 적절히 활용

○ 국가기간 시설에 대외원조를 집중 활용함으로써 발전토대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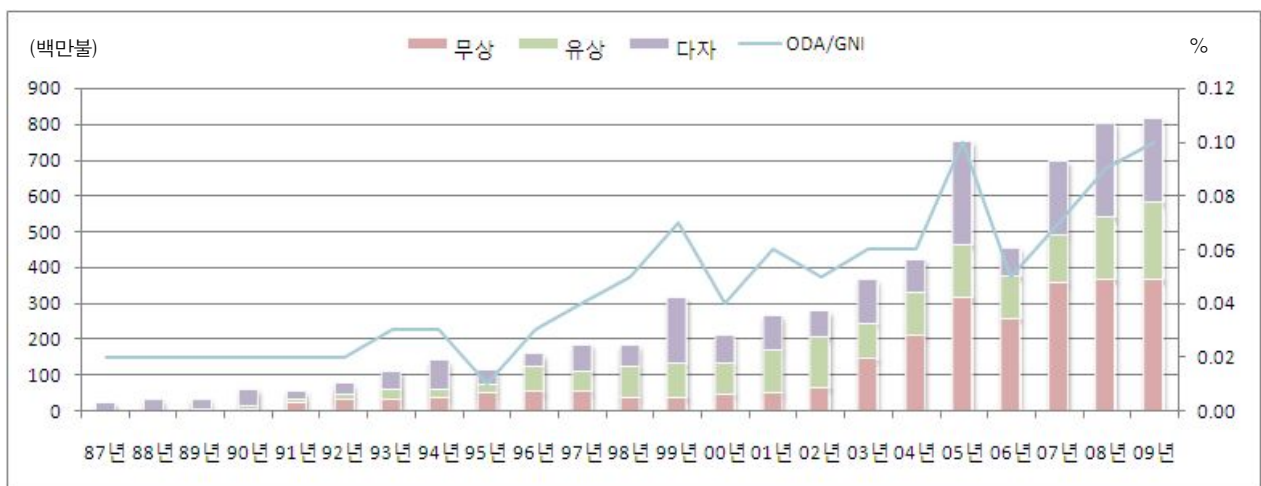
○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 자조노력을 지속하여 원조의 덫(Aid Trap)을 피해 자립의 기반을 확립

□ (원조의 종료)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역사를 마무리

☞ 경제·사회개발의 촉진제(catalyst)로서 원조를 활용한 모범 사례로 평가

## 2. ODA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 (공여규모) 그 동안 우리나라의 총 원조규모는 약 **69억불\*** (87년~09년)이며,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68%) \* 총지출 기준
- **60-70년대** : USAID 자금으로 개도국 초청연수(63년)를 처음 시작하고, 70년대는 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소규모로 추진
- **80-90년대** : **EDCF**(87년), **KOICA**(91년) 탄생으로 대외 원조의 기본 틀을 갖추고 **90년대부터** 대외원조를 본격화
- **2000년대** : '03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 지원, MDB 출연 · 출자 증가 등으로 ODA 규모가 급격히 증가



- (원조성과) 원조규모의 확대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등을 인정받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05)하고, 기본법을 제정('09.12)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을 정비

☞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적은 원조규모, 짧은 원조역사, 추진체계 다원화로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

## 1. 원조 이념 및 추진체계

□ (원조이념) 국가차원의 공식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문서 없이  
ODA 지원과정에서 유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 \* (유상)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대외경제협력 촉진(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무상)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 경제·사회발전 증진(한국국제협력단법)

□ (추진체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별로 다원화된 체계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 미약

- 양자원조 : 유상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EDCF)이 전담하고  
무상은 외교부와 KOICA, 개별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

\*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약 30개 내외

- 다자원조 : 국제금융기구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하고, UN은  
외교부,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는 소관부처별로 추진

<참고> ODA 양다자 및 유무상 담당기관 현황

ODA 형태		담당기관	비고
양자원조	유상원조	기획재정부(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원조	외교부(KOICA), 30개 개별기관	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에 의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및 개별기관	

## 2. 원조 규모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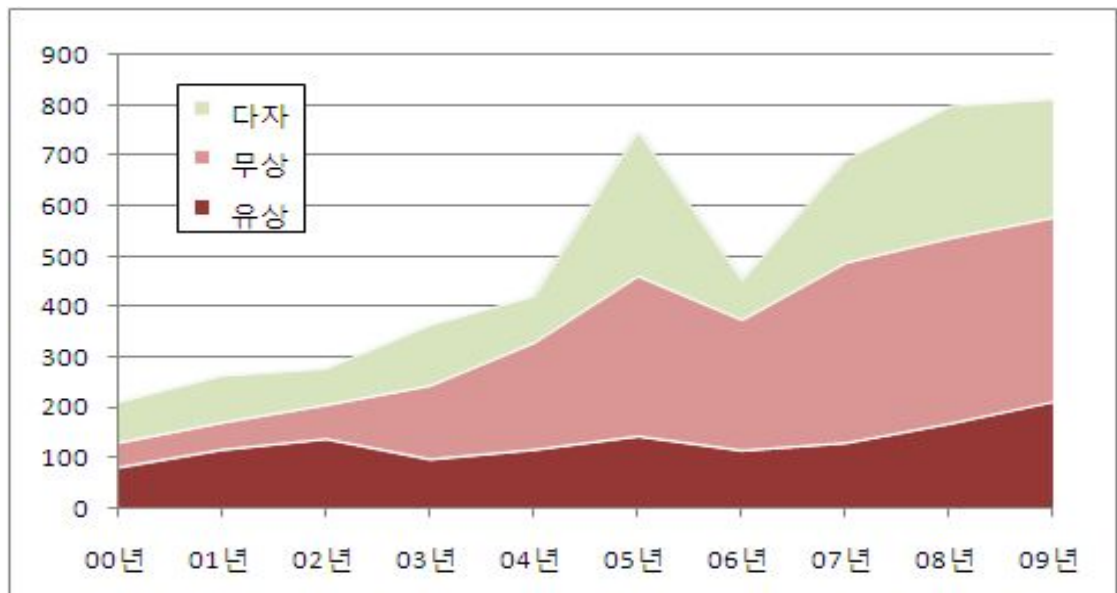
□ (원조규모) '00~'09년까지 총 원조 규모는 51억불 상당이며,  
 '00년 2.1억불 → '09년 8.2억불로 약 4배 증가

○ 양자원조 : 총 35억불 규모로 '00년 1.3억불 → '09년 5.8억불로  
 증가했으며, 이 중 유상이 13억불, 무상이 22억불을 차지

\* 03년에 무상비율이 50% 초과 (무상비율: '00 36%, '03 59.3%, '06 68.9%, '09 63.1%)

○ 다자원조 : 총 16억불 규모, '00년 0.8억불 → '09년 2.3억불

\* MDB를 활용한 원조 비중이 높음('00 69.4%, '05 83.2% '09 68.3%)



□ (원조구성)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사업 형태별로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00~08년 기준)

○ 아시아(21.3억불, 68.3%), 아프리카(3.7억불, 11.7%) 중남미(2.4억불,  
 7.5%), 기타지역(3.8억불, 12.5%) 순

○ 무상원조의 경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7.6억불, 41.6%),  
 기술협력(7.0억불, 38.5%), 인도적 지원(1.2억불, 6.4%), NGO 지원  
 (0.4억불, 2.1%) 순이며, 유상원조는 모두 프로젝트(13.0억불, 100%)

### 3. 원조의 주요 특성

- (다원화된 추진체계) 양다자간, 유무상간 추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연계시스템 미흡
  - 통합적인 전략 없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형태별·분야별 연계를 통한 효과성과 지속성 제고에 한계
- (유상원조의 적극적 활용) DAC 회원국(12.6%)과 비교할 때 우리의 유상 비율(36.3%)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08년 총지출 기준)
  - 상대적으로 짧은 공여역사와 우리의 주요 지원대상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유상원조(EDCF) 수요에 기인
- (H/W 중심의 사업) DAC 회원국(6.9%)에 비해 프로젝트 원조 비율이 높은 수준(13%)이며, S/W 원조 비중이 미약
- (낮은 비구속성 비율) ODA 사업 추진시 국내 기업·인력·물자 중심으로 조달하여 원조의 비구속성이 낮은 수준
  - \* '08년 비구속성 비율 : 35.8% (무상 43.3%, 유상 34.0%)
  - \* '08년 OECD 평균 : 86.5% (무상 87.6%, 유상 82.6%)
-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원조) 다자원조는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지원에 중점(68.3%)
  - UN을 비롯한 기타 국제기구의 지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10년 원조사업 분석결과

### □ 기본현황

- (지원기관 및 규모) 총 32개 기관, 1조 2천억원 수준  
\* 행정비용 및 집행예정사업 등 포함시 1조 3천 400억 수준
- (지원사업) 104개 국가·60개 국제기구에 1,073개 사업 추진

### □ 세부분야별 지원현황 \* 추후 DAC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양자/다자) 양자(국가간) **74%** / 다자(국제기구) **26%**
  - (유무상 비율) 양자사업중 유상은 **52%**, 무상은 **48%**  
\* 행정비용 및 집행예정사업 등 포함시 유상은 40%, 무상은 60%  
\* DAC 평균(08) : 양자(68%)·다자(32%) / 유상(12.5%), 무상(87.5%)
- (지역별) 아시아(**52%**), 아프리카(17%), 중동(7%)순이며,  
베트남은 유무상 모두 최대 수원국(57개 사업 1,200억원)
- (분야별) 경제산업인프라(44%), 보건(18%), 교육(16.9%)순
- (형태별) 프로젝트(**56%**), 국제기구(9%), 초청연수(8%) 순

### □ 조사결과 주요 특징

- (사업의 분절화 경향)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국가(104개)·국제기구(60개)에 너무 많은 사업(1,073개)을 지원
- (사업의 중복) 컨트롤 타워 없이 유무상간, 기관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유사사업이 다수 발생  
\* 새마을 관련 초청연수·인력파견 : 행안부, 농진청, 경북도, KOICA 등이 각각 추진



- **(원조효과의 지속성 저하)** 관련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H/W원조**에 집중하여 원조효과 지속성에 한계
  - 반면에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인적역량 개발, 기술전수 등 고부가가치 **S/W원조(15%)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
- **(유무상 연계 미흡)** 유무상간 사업규모 및 지원분야의 차별성이 적어지고 있으며, 연계사업 추진도 부진한 상황
  - \* 공통지원분야 : 도로, 관개수로, 식수, 병원, 교육, IT 시스템 등

◇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ODA 규모, 추진체제,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ODA 규모가 OECD 23개 회원국중 19위로서 우리의 경제규모 및 국가위상에 비추어 낮은 수준('09년 기준)
- 국가차원의 통합전략 없이 유무상 및 개별부처로 ODA 사업이 다원화된 추진체제
- 높은 구속성 비율, 사업의 분절화와 파편화 등으로 인해 원조 효과성도 낮은 상황

☞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ODA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



---

## Ⅲ.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SWOT)

**2**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3**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 1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SWOT)

	Strength	Weakness
국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발전한 성공사례</li> <li>○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발전경험 보유</li> <li>* 경제위기 극복, 저탄소 녹색성장전략 등 새로운 경험과 발전모델 지속 창출</li> <li>○ 개도국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어 진정성 있는 접근 가능</li> <li>○ 분야별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 보유</li> <li>○ NGO 등 시민사회, 민간기업들의 ODA에 대한 관심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원조역사와 상대적으로 작은 원조규모</li> <li>○ 분산화된 원조 추진체제 및 ODA 전문인력의 부족</li> <li>○ 개도국 연구 및 한국적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미흡</li> <li>○ 일반국민들의 낮은 인지도</li> <li>○ 개발컨설턴트 등 인프라 미흡</li> </ul>
국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증대</li> <li>○ 우리의 개발경험과 잠재력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관심</li> <li>○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한 독자적인 역할 가능</li> <li>○ G20, HLF-4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 정체</li> <li>○ 다양한 개발주체 등장에 따른 원조분절화 심화</li> <li>○ 주요 국가의 자국 이익을 위한 ODA 활용 경향</li> <li>○ 세계경제 블록화로 인한 국제협력 경쟁환경 치열</li> <li>* 중국·인도 등 신흥공여국 등장</li> </ul>
	Opportunity	Threat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수원국 개발수요와  
우리의 특성 결합국가전략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추진두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OECD DAC 회원국 / ODA 규모 및 비율 / 통합체제 구축

##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개발경험 분야
  - 개발경험 정리
  - 정책 컨설팅
- 사업기술 분야
  - 경쟁력기술(ICT, 농업 등)
  -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 감성 분야
  - 감동사례 발굴·공유
  - 한국적 미와 정감

원조 시스템  
효과적 개편

- 국가전략 부문
  - 지역별 기초
  - 중점협력국, 통합 CAS
- 사업수행 부문
  - 사업발굴 및 선정
  -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 수원국과 협력 강화
- 평가 부문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의 평가결과
  - 환류

## 국제 활동 강화

-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 다자원조 전략
  - 선진공여국 협력
- 국제기구 참여확대
  -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 ODA 조달시장 참여
- 국제규범 준수
  - 국제규범 형성 참여
- 인도적 지원 강화

원조 소외국(1개)을 선정, 총체적 접근을 통한 개발협력의 성공사례 도출

##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의 확대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전문인력 양성

# 1. 국제개발협력의 이념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기본정신을 존중

-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 □ 기본정신의 틀 안에서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개발협력 추진

### ① ‘수원국에 희망을’ ⇒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자립

-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립능력 개발에 초점

### ② ‘국제사회에 모범을’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

- 인도주의, 인권,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동참하면서 UN, OECD 등 국제기구활동에도 적극 참여

### ③ ‘국민에게 자긍심을’ ⇒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의 자부심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활용

☞ 수원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새로운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

## 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방식

###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특성을 결합한 원조

- 수원국이 빈곤퇴치와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함께 고민하고 수원국의 입장에서 협력방안을 모색

\* 단순히 빵 보다는 빵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 생산시설 지원 등 중시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되, 수원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

### ② 국가전략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체계적인 원조

-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 H/W와 S/W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접근방식 추진
-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과 개발경험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여 자립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성공사례 창출

### ③ 진정성을 담아 두 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 원조를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때의 경험을 떠올려 진정으로 수원국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원조 실시

\* ODA 정책 수립, 정책협약, 사업추진 등 전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정성과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고려

- 원조과정에서 단기적 이해관계 보다는 수원국의 발전을 통한 장기적 우호관계 유지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중시



## 1.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역할

### ① 국제기준에 맞는 개발협력 구현

- OECD DAC 등 국제사회가 정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규범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발협력 추진
  -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로마선언,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 \* 원조규모 확대를 위한 몬테레이 고위급 회의 결과 등
  - \* OECD DAC 권고(Recommendations), 지침(Guidelines) 등

### ② OECD DAC의 새로운 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독특한 지위에 맞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에 중점
- 아울러, 우리의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발전을 위한 지식창출에 기여

### ③ OECD DAC 특별권고사항의 착실한 이행

- '08년 OECD DAC 특별검토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을 착실하게 이행

- ① (추진체계) 법적 기반 확립, 단일 원조기관 구성, 포괄적인 중기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제고 전략 시행
- ② (규모 및 배분방안) 원조확대 공약 이행, 증여율 관련 권고사항 준수, 유무상 통합 추진전략 시행, 통합 중점대상국 선정 및 다자원조 전략 수립을 통한 선택과 집중
- ③ (시행조직) 원조체계의 분절화 완화, 통합 CAS 활용, ODA인력 전문성 강화,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 ④ (원조효과성) 수원국 체계 활용, 공여국간 원조조화 강화, 비구속성 비율 확대
- ⑤ (인도적지원) 인도성·중립성·독립성 강화,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인도적 활동 강화, 다자원조채널 적극 활용

## 2. ODA 규모 및 비율

### ① ODA 규모를 '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

- 한국의 **ODA/GNI 비율은 0.1%** 수준으로 OECD DAC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DAC 평균에 크게 미달
  - \* OECD DAC 평균(09년) 0.31%, 미국 0.20%, 일본 0.18%, 영국 0.52% 등
  - \* UN은 '15년까지 0.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 우리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ODA 규모 달성을 위하여 **'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확대**  
(‘08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참고> 연차별 ODA 확대계획

연도별	'09실적	'10예상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 ② 양자·다자간 비율은 70:30 수준으로 유지

- 최근 양자·다자간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7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DAC 평균과도 비슷한 수준
  - \* 최근 5개년 양다자 비율(총지출기준) : ('04) 77:23 → ('05) 62:38 → ('06) 78:22 ('07) 72:28 → ('08) 69:31
  - \* OECD DAC 평균 다자원조 비율('89~08) : 약 27%~32%, 미국 12%, 일본 22%, 영국 22%, 캐나다 29%, 이태리 48% 등
- '15년까지 양자·다자간 ODA 예산비율을 **현행과 같이 평균 70:30 수준으로 유지**

### ③ 유상·무상 비율은 40:60 내외로 유지 (순지출 기준)

- 현재 우리나라 유상비율은 국제사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 \* 우리나라 유상비율(총지출기준) : 36% ('08)
  - \* 주요 유상지원 활용 8개국 평균(총지출기준) : 24% ('08)
- 국제사회의 추세, 기증인 차관 등 수원국에 대한 약속 이행 등 여러 여건을 감안, '15년까지 유무상 비율을 **40:60** 내외 (순지출 기준)로 유지

### ④ 비구속성 비율은 15년까지 75% 수준으로 제고

- 우리나라의 **ODA 비구속성 비율은 36% 수준**(무상 43%, 유상 34%)으로 국제사회에 비해 낮은 수준
  - \* 비구속성 비율 : ('04) 4% → ('05) 3% → ('06) 1% → ('07) 25% → ('08) 36%
  - \* '08년 DAC 평균 86.5%, 미국(75.0%), 일본(96.5%), 영국(100%), 프랑스(81.9%)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무상 100%, 유상 50%) 까지 단계적으로 제고
  - \* 무상 : ('08) 43.4% → ('12) 75% → ('15) 100%
  - 유상 : ('08) 34.0% → ('12) 40% → ('15) 50%

### 3.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체제 구축

#### 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유무상, 각 부처 ODA 정책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
- 유무상 분야별로 주관·시행기관간 협의체 및 국별 현지 협의체를 구성, ODA 정책 및 사업 조율 기능 강화
- 분야별 ODA 정책 및 사업결정에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관부처, 소관부처, KOICA·EDCF간 협력체계 구축

#### ② 국가차원의 통합 ODA 전략 수립

- 우리나라 중장기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추진
  - 매년 다음연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추진
-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유무상 통합 국별 지원전략(CAS) 수립

#### ③ 유무상 통합평가·홍보 및 통계관리

- 유무상 사업간 연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사업간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
  - \* 총리실에 평가소위를 설치, 통합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운용
- 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홍보 T/F’를 구성하여 유무상 통합 홍보전략과 연도별 홍보계획 수립·추진
- ODA 사업·예산·실적을 통합적으로 취합·분석·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간 공유

---

## IV.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

**1**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2**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3** 국제활동 참여 강화



# 1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1-1

#### 추진 필요성

- 최빈국에서 단기간내 국가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선진국과 차별화된 특유의 **ODA 잠재력 보유**
  -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을 통한 단기간내 빈곤탈출과 농업중심에서 산업화·정보화 등 다양한 단계의 발전경험 보유
    - \* 경제발전 1세대가 실제 활동하고 있어 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토대도 확보
  - 개도국과 유사한 여건(식민지, 전쟁경험 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 심리적 동질감과 신뢰감 형성이 용이
  - 개도국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기술과 함께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노하우도 보유
- 발전의지가 강한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한국 발전모델에 큰 관심 표명
  - 탄자니아, 에콰도르, 몽골 등 수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을 자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사 표명
  - OECD, WB,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전문가 들도 한국의 개발경험을 활용한 개도국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 \* 세계적 석학 Jeffrey Sachs 교수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로 규정('07.3월 서울 ODA국제 회의)

☞ 우리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ODA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발굴·정리하고, ODA 콘텐츠를 작성·활용할 필요

◇ (활용현황) 재정부·외교부가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한 정책자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부처는 초기 단계

- (재정부) KDI 등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KSP** 사업을 시행중
  - 정책자문 : **22**개국에 대해 **200**개 컨설팅 지원(04~10)
  - 발전경험 모듈화 : 총 **100**개 정리계획('10년 20 → '11년 40 → '12년 40개)
    - \* 이와 별도로 재정부의 발전경험정리협의회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자체개발경험 정리를 지원할 계획
- (외교부) KOICA를 통해 행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컨설팅과 기술컨설팅을 제공
  - '91년부터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 **ODA** 모델화 추진중
- (농식품부) 새마을 운동에 기반을 둔 농촌개발, 농업기술 등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술전수 등을 추진
  - 특히, 개도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상호 협력 연구를 통해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KOPIA**\*사업 시작
    - \* 현재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크,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등 6개국에 설치
- (복지부)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 개발경험을 정리하여 **한국형 보건의료 원조모델 수립 및 모듈화** 추진중
  - \* 모자보건 및 일차보건의료사업, 결핵관리사업, 기생충퇴치사업 등 모듈화
- (교과부) '13년까지 **한국형 교육발전 모델\*** 구축 예정
  -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원정책,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 (보완 필요사항) 개발경험 공유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개발경험 정리와 전수과정 등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 취약

□ 기관별로 대상국가와 분야가 중복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기관간 협의와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

\* 현재 개발경험 정리를 위한 추진체계가 재정부(KSP 추진협의회), 각  
부처,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다원화

□ 개도국은 우리 발전경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 부족

○ 개발경험 정리와 전수과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기관별로 산재된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집약

○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위해 개도국의 현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지식, 인력, 시간 확보 필요

□ 정책자문 결과가 단순히 컨설팅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 ODA  
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KSP, KOICA 및 관계 부처의 정책자문 결과를 상호 공유  
하여 후속 ODA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책자문 분야와 더불어, 프로젝트, 기술협력 등 실제 ODA  
사업에도 우리의 개발경험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노력 강화 필요

○ 우리가 보유한 각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 개도국에  
과급효과가 큰 ODA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

## I. 추진방향

◇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독특한 개발 및 원조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여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

⇒ 선진국과 차별되고,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ODA 추진기반 마련

## II. 콘텐츠의 구성

① 구축 대상분야 :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

\*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경, 산업에너지

② 콘텐츠 분류 : 개발경험분야, 사업기술분야, 감성분야

## III. 분야별 콘텐츠 개발방안

① (개발경험분야) 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경험을 정리

- KSP 모듈화 계획에 따라 '12년까지 8대 분야 100개 주제 정리

② (사업기술분야) 프로젝트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 대상 사업 및 기술의 LIST를 선정하고 핵심내용을 정리

- 8대 분야별로 10개 사업을 정리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③ (감성분야) 원조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사례나 성과, 한국적 美나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발굴·정리

- 감동사례(KOICA, EDCF), 한국적 美나 정감 사례(문화부)

## 1-4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방안

### 1 개발협력 콘텐츠의 구성

#### 1) 대상 분야

- 그동안 우리의 개발 및 원조경험이 풍부하고, 개도국의 원조 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
  - **(8대 분야)** 경제 분야, 보건의료 분야, 인적자원 분야, 행정·ICT 분야, 농어업분야, 국토건설 분야, 환경 분야, 산업에너지 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여성·인권 등 범분야(Cross-cutting Issue)는 8대 분야에 모두 포함시켜 콘텐츠 개발에 반영
- 분야별로 소관부처 참여하에 콘텐츠 개발(KOICA/EDCF 협조)
  - 소관부처(분야별 콘텐츠), KOICA/EDCF(원조경험 노하우)
  - 소관부처는 계획 수립 및 콘텐츠 작성과정에서 산하기관, 연구소, 대학, NGO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분야 및 소관부처>

8대 분야	소관부처(참여기관)	비 고
경제	재정부	• Cross-cutting Issue : 여성부 등  • 감성분야 : 문화부
보건의료	복지부(식약청)	
인적자원	교과부, 고용부	
행정·ICT	행안부, 법무부, 방통위, 지경부	
농어업	농식품부(농진청), 행안부	
국토건설	국토부	
환경	환경부	
산업에너지	지경부(중기청)	

## 2) 개발협력 콘텐츠의 분류

◇ 개발협력의 사업형태 및 활용가능성을 감안, ▲ 개발경험(컨설팅), ▲ 사업(프로젝트), ▲ 감성(진정성)으로 나누어 구축

□ (개발경험분야) 우리의 개발경험 중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 개도국 정부 정책자문, 제도개선, 개발조사 등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 경제개발계획, 수출진흥정책, 경제위기 극복경험, 직업훈련 등

□ (사업기술분야)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확대 등 실제 ODA 사업에 활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ODA 사업목록(Inventory)

○ 프로젝트 사업, 기자재 지원, 기술협력 등 **ODA**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업기술 목록(Inventory)을 구축

\* 농산물가공센터, 전자정부시스템, 지형도 제작, 전력망 구축 등

□ (감성분야) 원조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사례, ODA 과정에서 한국적 특성을 가미할 수 있는 콘텐츠

○ ODA 과정에서 개도국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한국적인 **美나** 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례

## 2 단계별 구축방안

### 1) 우리나라의 총체적 개발경험 정리

- 한국의 발전모델 자체에 관심이 많고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개도국 최고위급 인사에게 우리의 총체적 개발경험을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 브리핑 자료는 개도국의 수요에 맞게 영어·불어·서반아어로 번역하고, 직접 브리핑하거나 또는 DVD 형태로 제작(1시간 분량)
- 개도국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한국의 핵심적인 발전과정을 담아 성공요인 및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
  - 새마을 운동, 경제성장 과정,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종합 정리

### 2) 8대 분야별 콘텐츠 구축

- 분야별로 대상 개발경험과 사업기술을 선정하여 콘텐츠 작성
  - 일관된 체계로 콘텐츠를 정리하고, ODA 사업과정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
  - ODA 효과가 큰 핵심적인 개발경험과 사업기술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선정기준 마련
    - 한국의 특성이 담겨 있고 선진국과 차별되는 비교우위가 있으면서 ODA 잠재력이 큰 사례
    - 개도국에 적용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크고, 정책자문과 후속사업 또는 사업간 연계가 용이한 사례
    - 그동안의 원조과정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많았던 사례 등

- **(개발경험분야)** 정책자문 또는 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개발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
  - 재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KSP 모듈화 계획**에 따라 소관부처의 참여하에 '12년까지 **100개** 주제를 선정·정리
    - 정리대상 주제 및 작성 담당기관 선정, 콘텐츠 작성 및 검증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주도적으로 참여
    - \* 가이드라인 작성 및 주제 선정시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협의
  - 부처 및 출연기관의 신규과제는 **KSP 모듈화 계획으로 통합 검토\*\***
    - \* 내년부터 개별부처와 출연연구기관이 재정부의 KSP 모듈화 계획과 별도로 개발경험을 정리하는 것은 지양
  
- **(사업기술분야)** 프로젝트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전수대상 사업 및 기술의 핵심내용을 정리
  - 외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관부처가 사업·기술 리스트를 선정하여 정리
  - 분야별로 사업·기술을 발굴하여 부처·KOICA·EDCF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되, 사업효과를 감안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
    - 기타 잠재력이 큰 사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청도 제출
    - \* 부·처·청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리
    - 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도 그동안 원조과정에서 효과가 컸거나 성공적으로 검증된 사업·기술을 정리
  
- **(감성분야)** 원조과정에서 개도국이 원조의 진정성을 느끼고 우리의 독특한 감성이 스며들 수 있는 원조방안 마련
  - 재정부(EDCF)·외교부(KOICA) : 감동적인 ODA 사례 등 작성
  - 문화부 : 원조과정에서 한국적 美나 정감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

### 3) 콘텐츠를 활용한 원조모델 개발

-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국내 기관간 협조체계, 원조사업의 입체적 구성, 수원국 중심의 원조방식, 사업의 사후관리 등을 모듈화한 원조모델을 개발
  -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중 ▲ 새마을 운동(농촌종합개발) ▲ 직업훈련 프로그램 ▲ 모자보건 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 새마을 운동은 금년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립
  - 기본모델을 토대로 CAS와 개도국의 실정에 따라 현지화하여 적용하면서 사후평가를 통하여 보완 발전
- 재정부·외교부(KOICA)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조모델 개발

#### 모델 사례(예시) : 직업훈련 프로그램

- ① (성과목표) 고용기회확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전문기술 보급
- ② (개발경험 콘텐츠 분석) 직업훈련 분야(자동차, 섬유 등)에서 우리나라 제도운영 경험(자격검정시스템 등) 및 성공사례 분석
  - \* 국제 ODA 지원동향, 개도국의 여건 분석 등 수원국 입장에서 시사점 도출
- ③ (사업기술 콘텐츠 분석)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기술이 담긴 ODA사업 선정 및 입체적 구성(컨설팅, 건축, 기자재지원,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 \* 감성분야도 포함
- ④ (관계기관 협조체계) 고용노동부, KOICA, EDCF, 직업훈련관련기관 등
- ⑤ (원조모델 마련) 기본모델 마련, CAS와 수원국 실정에 맞게 현지화
- ⑥ (사업관리) PCM, PDM 활용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개발협력 콘텐츠는 우리나라 원조의 핵심사업으로서 정책컨설팅, 원조사업간 연계, 원조모델 수립 등에 다양하게 활용

### 3]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추진체계

#### 1.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매년 개발경험·사업기술·감성 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추진계획을 심의·확정

\* 총체적 개발경험 정리, 콘텐츠 작성 가이드라인도 포함

□ (콘텐츠 총괄기관) 개발경험 분야는 재정부\*, 사업기술 분야와 감성분야는 외교부가 총괄기관 역할 수행

\* 우리나라의 총체적 개발경험 정리계획도 포함

○ (KSP추진협의회) 관계부처의 참여하에 부처의 자체 개발경험 정리계획을 포함한 매년 차기년도 개발경험 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추진계획을 수립

○ (무상원조 협의회) 관계부처의 참여 하에 사업기술분야 및 감성분야의 계획을 수립

□ (콘텐츠 소관부처) 8대 분야별로 지정된 소관부처는 개발경험, 사업·기술 분야에 대해 재정·외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에 참여

\* 사업기술분야는 모든 부·처·청에서도 콘텐츠 개발 가능

○ KOICA, EDCF도 그간 원조사업경험을 토대로 콘텐츠 정리

#### 2. 추진방안

□ 콘텐츠 개발계획은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 시행과정에서 총괄기관과 소관부처간 긴밀한 협의



□ **(국가전략)** 유상과 무상, 무상내 개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원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조율하는 국가차원의 원조전략 수립체제가 미비

○ **지역별 정책기조 및 자원배분 기준** : 유무상이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기본 틀이 없는 상황

○ **중점협력국** : 유무상별로 각각 선정·운영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구조

\* 중점협력국 : 유상(16개), 무상(19개), 일반협력국 : 유상(48개), 무상(49개)

○ **국가지원전략(CAS)** : 유무상별로 각각 수립하고 있어, 동일 국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국가지원전략을 운영

\* 현재 유상 11개국, 무상 19개국에 대해 CAS를 작성·운영 중

※ 무상의 경우 외교부의 지역별 정책기조 및 자원배분, 중점협력국, CAS가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공유조차 되지 않는 구조

□ **(사업수행체계)** 사업추진시 유무상 기관, 개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가 미흡하여, 원조사업의 분절화와 현장에서의 사업조율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 **사업발굴 및 선정** : 사업발굴이 개별적으로 수원국과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업선정도 사업확정 단계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여 각 부처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

○ 원조사업의 효율성

- 유상과 무상간, 정부와 민간간 초기단계부터 연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고, 프로그램형, 패키지형 사업모형도 미흡
- 원조사업인 프로젝트, 초청연수, 기술협력, 개발경험전수 등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고려 및 평가 미흡
- 개별부처와 원조집행기관(KOICA, EDCF)간 협조 미흡

○ 수원국과의 협의체계

- 원조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원국과 접촉하여, 협의창구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중기지원전략 부재에 따른 원조의 예측가능성 저하
- 수원국의 실정에 맞게 원조사업을 발굴·수행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능이 취약

□ (평가시스템) 그동안 유무상기관이 자체평가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보완조치가 미흡

○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 미비 : 유무상 사업 전반을 평가한 적이 없어 중복여부와 연계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평가체제의 객관성 미흡 : 독립기관이 평가를 주관하고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미비

\* 수원국의 평가참여 등 평가협력 활성화 및 평가역량 개발 부문 취약

○ 평가결과의 공개 미흡 : 원조사업의 책임성과 국민적 지지 확보 곤란

## 2-2 원조시스템 개편의 기본방향

### I. 목 표

- ◇ 분절화된 원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원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

### II. 추진전략

- ① “유·무상 통합전략 ⇒ 사업수행체제 ⇒ 평가”과정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추진체계를 구축
- ② 원조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
- ③ 국내 원조기관간은 물론 우리정부와 수원국간 협력 강화

### III. 추진과제

- ① 국가전략부문
  - 지역별 기조 ⇒ 중점협력국 ⇒ 국가지원전략(CAS)
- ② 사업수행부문
  - 사업발굴 및 선정과정 개선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 수원국과 협력강화
- ③ 평가부문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의 평가결과 ⇒ 환류

## 2-3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방안

### 1 유무상 통합전략 수립

◇ 지역별 기조와 자원배분, 중점협력국 선정, 국가별 지원전략이 유무상간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원조전략 수립

#### 1) 지역별 정책기조

□ 지역별 정책기조를 통해 ODA 전략과 자원배분의 기본틀을 설정함으로써,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원조 시행

○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별 정책기조 재검토

\* 급격한 여건 변화시 5년이내라도 정책기조를 변경·수정

< '06~'08 원조유형·지역별 지원 현황(총지출 기준)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기타
지역별 원조비중	45.5%	15.4%	13.6%	10.1%	15.3%
무상지원 비중	56.0%	65.2%	91.6%	58.3%	75.5%
유상지원 비중	44.0%	34.8%	8.4%	41.7%	24.5%

\* 기타: 유럽, 대양주, 미배분(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원조 등)

□ 지역별 자원배분 원칙

○ (아시아)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근성 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

\* 신아시아 외교구상('09.3),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08.7) 등

- 양자원조의 55%내외를 지원하되, 빈곤정도와 발전단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아프리카) 빈곤감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과 성장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
  - \* 한-아프리카 포럼(09.11)을 통해 '12년까지 '08년 대비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
  - 양자원조의 20% 내외를 지원하고, 고채무 빈곤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
- (중남미) 우리의 개발경험 및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증가 등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을 확대
  - 양자원조의 10% 내외를 지원하고, 소득불평등 개선과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
- (중동·CIS) 이라크 등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강화와 함께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추진
  - 양자원조의 10% 내외를 지원하고, 전후복구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
- (오세아니아 및 기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원조소외국을 지정하고, 인도적 지원확대, 개발경험 전수, 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등 총체적 지원을 통해 개발협력의 성공모델 구축
  - 양자원조의 5% 내외를 지원하고, 소규모 저개발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원

☞ 상지원칙에 따라 유무상별 세부적인 지역별 정책기조와 자원배분은 재정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외교부는 다른 무상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포괄하여 계획수립

## 2)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가 선정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무상이 각각 선정·지원하고 있는 중점협력국가를 **26개국**으로 통합·운영

○ 통합 중점협력국에 대한 최소 지원비율을 유무상 각각 **70% 수준**으로 설정

\* 매 3년마다 중점협력국 제도를 재검토하되, 필요시 3년 이내라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거나 추가

< '04~'08년 주요국의 수원 상위국에 대한 지원비중(%) >

	한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상위 10개국	60.0	70.2	56.2	44.7
상위 20개국	75.9	83.3	76.0	64.9
상위 30개국	85.5	91.9	85.4	76.9

\* 국별배분이 불가능한 양자원조(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원조 등)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범위) OECD DAC 수원국(152개국) 중 중하위소득 이하 국가(1인당 GNI \$3,705이하)로 한정(152개국 ⇒ 109개국)

○ 국제적인 원조기준 및 원조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역안배,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참고) 원조소외국 선정·지원

◇ 국제적으로 원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가(Aid Orphans)에 대한 대책의 일환

○ 원조소외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적인 원조 흐름에 동참하고 국격제고에 기여

○ 원조소외국에 한국적 특성이 담긴 총체적인 ODA 지원을 통해 개발협력의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창출

\* 대상국가의 대외공개여부는 외교관계등을 고려하여 별도 검토

☞ **재정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국가별 지원전략과 규모 결정**

\* 외교부는 다른 무상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포괄하여 계획수립

### 3) 유무상 통합 국가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수립

- 유·무상 기관별로 수립했던 **CAS**를 통합하여 국가차원의 **ODA** 지원 기본지침으로 활용

#### < CAS 작성 현황 >

	작성주체	절차	작성 국가수
유상	수출입은행	해당 지역팀에서 작성, 재정부 확정	11개국
무상	대사관, KOICA 현지사무소	대사관(KOICA 사무소)에서 초안 마련, 외교부 확정	19개국

-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시점을 고려하여 ‘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에 대해 통합 **CAS** 수립을 완료
  - 금년에 베트남 등 3개국에 대해 CAS 수립 착수
- 통합 CAS는 중점협력국 선정주기에 맞추어 3~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하되,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 여건변화 등을 고려
- 통합 CAS가 수원국 ODA 지원에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CAS**에 반영

- 유무상 통합 **CAS** 수립을 위한 절차

- ① 총리실 주관으로 통합 **CAS**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 현재 유·무상 CAS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어 구성과 내용상 통일성이 부족하고 전 부처에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
- ② 재정부(수은)·외교부(KOICA) 합동의 통합 **CAS** 전담팀을 구성·추진
  -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을 분석하여 우선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중점지원 분야 선정(국가별로 2-3개 분야)

\* 수립과정에서 관련부처, 전문가, 연구소, NGO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CAS 초안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도 높게 내용을 보완하고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WB, ADB는 CAS 관련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도 CAS 초안을 웹사이트에 게시

- ③ CAS 수립과정에서 수원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원국과 긴밀히 협의
- ④ 통합 CAS 초안을 보완하여 재정부·외교부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확정

#### < 통합 CAS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예시) >

- ① 국가개황
  - 위치, 면적, 인구 등 일반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② 국가개발 현황 분석
  - 빈곤현황 및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평가
  - 개발역량 및 주요 개발 장애요인
- ③ 국제사회 ODA 지원현황
  - 양자 및 다자지원 현황
- ④ 우리나라의 지원목표 및 전략
  - 우리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목표 및 전략 프로그램
  - 유무상 연계방안, 사업간 연계방안, 후속사업 및 유지보수, 특별 권고 이행방안 등 실행방안
  - 수원국, 타 공여국, NGO,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방안
- ⑤ 성과관리 방안
  -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수립

#### 재정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연차별 CAS 수립방안 결정

\* 외교부는 다른 무상부처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2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 ◇ 사업의 발굴,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ODA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원조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
  - \* 부처, EDCF, KOICA, NGO, 기업, 수원국, 국제기구 등
- ◇ 유·무상 연계, 정부와 민간사업 연계, 프로그램 접근법 등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 1) 사업 발굴 및 선정절차 개선

- 유상은 재정부(EDCF), 무상은 외교부(KOICA)가 사업발굴과 선정을 주관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양 기관간 충분한 협의가 부재

구분	사업발굴	사업선정	관련법
EDCF	수원국의 사업 요청	재정부장관이 외교부·지경부·교과부·사업주무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KOICA	수원국 요청 및 현지사무소 사업발굴	KOICA이사회(총리실, 재정부, 외교부, 교과부, 국토부), 외교부장관 승인	한국국제협력단법

- 사업발굴 : 유·무상 모두 수원국이 요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발굴 노력은 미흡
  - 관계부처, NGO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 절차가 미흡
- 사업선정 : 유무상 모두 실질적인 부처의견 반영이 미흡
  - 유상사업은 정책협의를 논의된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기본으로 사업별로 관계부처와 서면협의를 실시
  - 무상사업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 관계 부처 협의를 실시

□ (사업발굴 개선) 향후 우리의 ODA 증가 규모를 고려, 수원국과의 단기간의 정책협약에서 벗어나 **CAS** 등에 기초한 사업발굴 시스템을 구축

○ 개발협력 콘텐츠와 **CAS**에 근거, 유무상 통합 중점분야 및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과 정책협약 실시

- 사업발굴 단계부터 유·무상 기관간 협의를 정례화

\* 독일은 “독일하우스”라는 한 건물에 다양한 원조기관이 모여 있는 점을 고려, 우리도 EDCF, KOICA, KOTRA 등이 현지에서 한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 검토

○ 현지사무소 중심의 사업발굴 강화를 위해, 사업발굴 예산을 확대하고 현지 전문가 등 현장인력 확충

○ 사업발굴과정에서 관계부처는 물론 봉사단, **NGO, KOTRA**,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

- 사업발굴 관련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본 사업채택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선정 개선)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계부처간 충분한 사업검토를 실시

○ 유상부문 : 주요 후보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강화

○ 무상부문 : KOICA와 개별부처 사업안이 확정되기 전 주관기관 및 관계부처간 사전 검토를 강화

☞ 재정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사업발굴 및 선정과정의 세부 개선방안 마련

## 2)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 ◇ 원조기관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 원조사업간 연계 ▲ 원조사업별 개선 ▲ 개별부처와 원조집행기관간 협조강화 방안 필요

### 2)-1 원조사업간 연계강화 방안

#### □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연계

- 지금까지('91-'09년) 유·무상 연계사업은 22건으로, 모두 개발조사사업(무상, KOICA)이 유상사업으로 연계된 형태
  - 유·무상 연계를 전제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수원국의 요청 등에 의한 개발조사사업을 시행한 이후, 이를 유상 사업에 활용
- 국가별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유·무상의 역할을 정립하고 양자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
  - \* 금년에 시행중인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모형 보완

#### < 유무상 연계사업 모형(예시) >

- (모형 1) 개발조사/KSP(무상) + 프로젝트 사업(유상)
  - \* 무상으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유상으로 핵심시설인 교량을 건립
  - \*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무상 연계 모형
- (모형 2) 프로젝트 사업(유상) + 프로젝트 운영(무상)
  - \* 유상으로 병원건축, 무상으로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을 활용하여 기술지원
- (모형 3) 동일한 지역내 연계 : 인프라(유상) + 사회교육시설(무상)
  - \* 동일 지역에 유상으로 전력공급 후, 무상으로 학교를 건축
- (모형 4) 역량강화사업(무상) + 인프라(유상)

☞ 재정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유·무상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① 통합 CAS 수립시 국가별 특성과 중점사업을 고려하여 유·무상 사업의 역할분담 및 연계사업 검토

② 내년에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유·무상 연계 시범사업 추진

③ 유·무상 공동대표단과 수원국 ODA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시범으로 추진

\* 수출입은행-KOICA간 온라인상의 정보공유시스템 및 공동 사업 Pool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를 공유

## □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

○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사업의 연계는 초기단계이나, 개발 NGO의 활동 증가,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증대 등을 고려하여 연계확대가 필요

- **NGO** : NGO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역할 분담 차원의 연계는 미흡

\* NGO 사업 지원은 KOICA에서 '95년부터 실시하였고 금년 예산은 78 억원으로 KOICA 협력사업비의 2%에 불과

- **기업** : 공동사업발굴, Matching Grant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KOICA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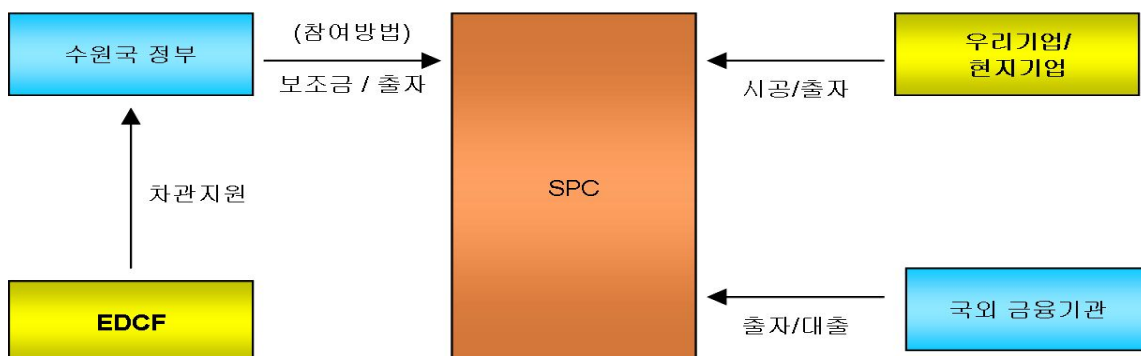
\* KOICA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으로 5개 기업에 10억원을 지원 (KOICA 협력사업비의 0.26% 수준)

## 【 유상협력 분야 】

- 유상협력을 통해 민자사업(PPP)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개도국의 실질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무역분야 개발이 시급하며, 대형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개발재원의 확충(Mobilization)이 필요
  - \* WB, OECD 등은 민자사업(PPP) 방식을 활용한 ODA 지원으로 개도국의 막대한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 제시

→ 유상협력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민자사업(PPP) 추진

### < 유상협력을 통한 민자사업(PPP) 추진 모형 >



## 【 무상협력 분야 】

- 정부, NGO 및 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연계모델 구축
  - **NGO** : 보조금 등 단순 지원 단계에서 벗어나 원조사업의 동반자·협력자 관계를 구축
  - **기업** : 기업의 **PPP** 참여 확대를 통해 원조효과를 제고

< 무상협력을 통한 정부-NGO간 협력 사업모형(예시) >

- (모형 1) 자금지원(정부) + 사업수행(NGO)
  - \* NGO 발굴 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NGO가 사업을 수행
  - \* 지금까지 우리나라 NGO 지원 연계 모형
- (모형 2) 프로젝트(정부) + 운영 및 사후관리(NGO)
  - \* 정부가 병원, 유치원 등을 건립, 운영 및 관리는 NGO가 담당
  - \* 현재 KOICA 프로젝트에 총 3건의 NGO 참여

< 무상협력을 통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모형(예시) >

- (모형 1) 공동자금(정부/기업) + 원조사업
- (모형 2) 타당성 조사(정부) + 프로젝트(기업)
  - \*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사업수행
- (모형 3) 사업수행(정부) + 운영 및 사후관리(기업)

☞ (유상협력) 재정부 주관으로 PPP방식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상협력) 외교부 주관으로 NGO 및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

① NGO 지원 및 PPP 사업을 포괄하는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15년까지 10배 확대('10년 90억원->'15년 900억원)

\*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ODA를 할 수 있도록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홍보 및 협력강화

② 내년도에 NGO 및 기업과의 사업모형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③ 관계부처 및 원조집행기관 합동으로 NGO와 기업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

## □ 패키지형 사업 추진

- 다양한 분야에 대해 프로젝트 사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분야별 종합 지원이 미흡
-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패키지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

### < 중점지원분야 연계사업(예시) >

- (목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협력 추진  
(사업) 타당성조사 + 다양한 원조사업의 연계 [인프라(관계수로 및 가공시설), 기술전수(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 지원(농기계)] + 사후관리(시설/기계 유지보수, 판로개척)

### < 중점지역 연계형 사업(예시) >

- (목표) 마을주민의 인간개발지수 향상  
(사업) 소득증대(농업) + 교육(초등학교, 새마을운동) + 보건(보건소) + 식수(우물)

## ☞ 재정부 · 외교부 주관으로 개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 사업 추진방안 수립

- ① (중점지원분야 연계형 사업) 수원국의 여건과 우리의 장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연계형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
  -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② (중점지역 연계형 사업) 내년도에 중점마을을 선정하여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일정기간 지원 후 중점마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원조효과가 큰 지역에 지원을 집중

## 2)-2 원조사업별 추진방안

- **(개발조사, 개발경험공유) 개발협력 콘텐츠 전수에 적합하며, 프로젝트 등 후속 ODA사업과 연계가능한 점을 감안, 사업비중을 확대**
  - \*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해 중복 등을 사전예방
- **(프로젝트) 사업선정시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 종료 후 자립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를 확대**
  - 사업결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 \* 현재 시행업체 책임하에 약 2년의 하자유지 보수를 운영 중
    - \* 사업종료 5-10년 이후를 고려하여 S/W 원조와 연계한 운영 또는 수원국의 자립운영방안 등을 검토
- **(초청연수) 현재 사업비중을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편 필요**
  -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초청연수사업을 외교부(KOICA)가 총괄·기획하고 교육콘텐츠와 교육운영은 각 기관이 담당
    - \* KOICA-부처간 초청연수사업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KOICA의 초청연수 운영체계 개편 및 초청연수 예산체계 통합을 단계적으로 검토
  - 각 기관의 연수생 초청시 외교부(재외공관)를 통해 수원국과 협의
  - 초청연수기간을 점차 늘리고,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사업을 확대하며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초청연수 교육과정 진단 실시
- **(봉사단 파견) 각 부처별 해외봉사단 사업예산을 KOICA의 World Friends Korea 사업예산으로 통합 운영**
  - \* 중장기자문단(외교부), IT청년봉사단(행안부), 대학생봉사단(교과부), 퇴직전문가(지경부) 등

☞ 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를 중심으로 소관별 종합적인 세부 개편방안 마련



## 2)-3 개별부처와 원조집행기관(KOICA,EDCF)간 협조강화

- 부처와 원조집행기관이 개별적·경쟁적으로 원조사업을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 및 사업중복 등의 문제
- 원조과정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재정부·외교부와 협력 강화
  - **(국가전략수립)** 지역별 정책기조, 중점협력국 선정, CAS 수립 과정에서 재정부·외교부 주관으로 개별부처의 의견수렴 및 협의
  - **(사업수행과정)** 개별부처(산하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과 원조집행기관의 원조노하우, 현장경험 등이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업발굴 및 선정 : 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가 상시적으로 사업수요를 제출하고 재정부·외교부는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기 전 관계부처 협의절차 마련
      - \* 관계부처의 프로젝트사업 요청 대비 반영률 : (08) 3% → (10) 12%
    - 사업중복 배제 : 예산편성과정과 주관기관의 시행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업중복을 배제
    - 사업간 연계 : 부처 단독 사업도 원조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평가과정)** 평가소위에서 내년도에 개별부처와 원조집행기관간 협력 시스템을 평가

- ① 외교부(KOICA)를 중심으로 무상분야 ODA 과정에서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협조시스템 구축
  - \* 재정부(EDCF)도 유상과 개별부처의 협조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 ②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부처와 원조집행기관 사업간의 중복 여부 및 연계강화를 점검

### 3) 수원국과의 협력 강화

- **ODA 운영체제를 수원국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수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
  - 유상, 무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수원국과 개별적으로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분야에 대한 수원국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
- **(수원국 협의절차 개선)** 개별부처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며, 공관은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
- **(예측가능성 제고)** 수원국이 ODA 지원을 토대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3년 단위의 지원계획(Rolling Plan)**를 시범적으로 마련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추진
  - \* CAS와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지원규모, 잠정 사업리스트, 지원분야, 전략 지원지역 등 수록
- **(수원국의 자립기반 마련)** 우리나라 ODA 지원사업에 대해 수원국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주인의식을 갖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원국의 사전운영계획 확인협의, 사후관리 예산 공동편성, 자립적 사업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확대, 수원국 시스템 활용
  - 자립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젝트 사후관리를 종료하는 **졸업제도 도입**
    - \* 사업 종료 5~10년 후 자립여건 조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결정

☞ **재정부·외교부가 협의하여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 세부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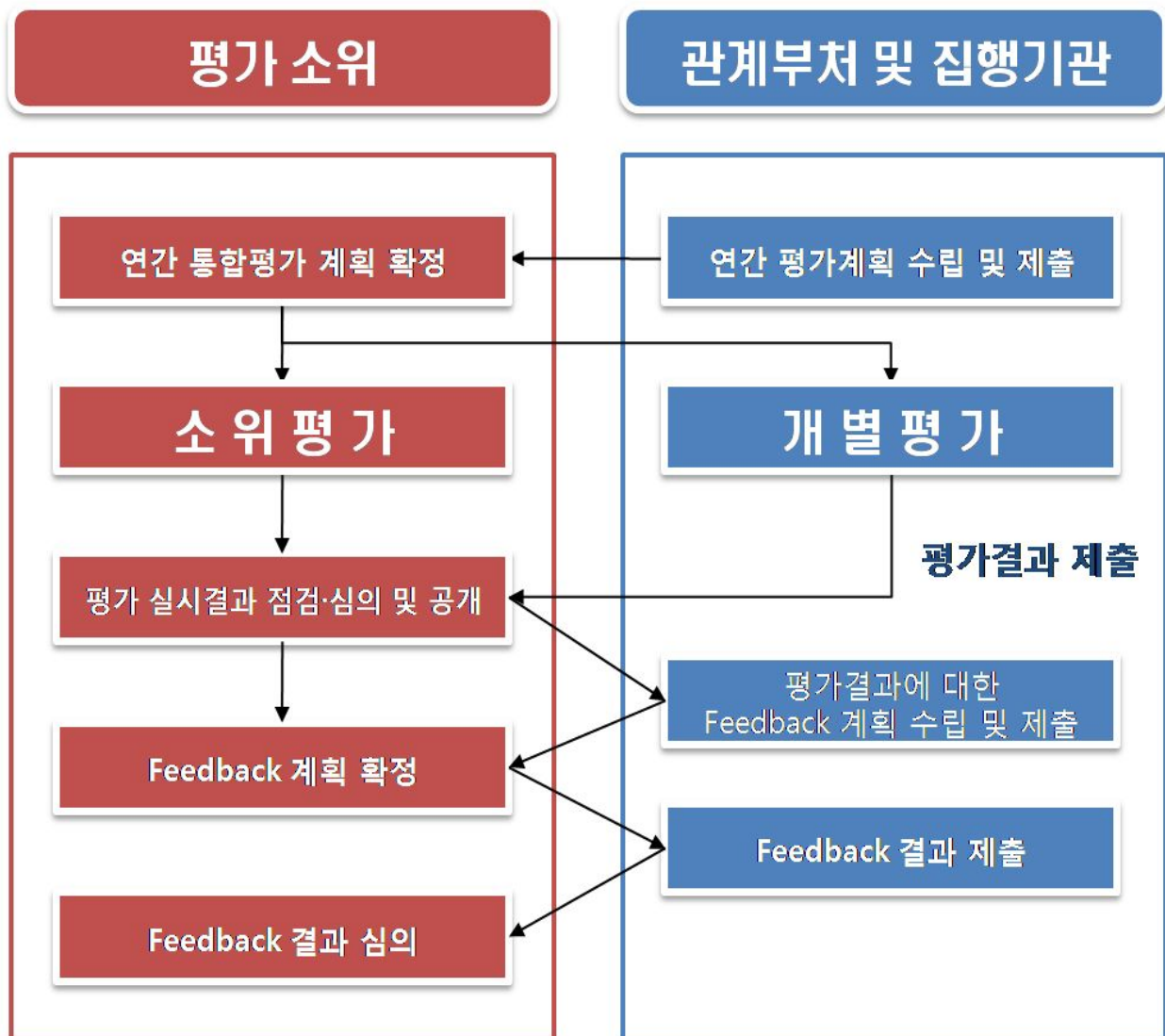
### ③ 평가역량 강화

- 유무상 기관이 각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 부족과 관대화 경향이 발생하고 유무상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
  - 프로젝트별 평가 위주로 추진되어, 주제별 평가, 국별 평가, 유무상 연계평가 등 다양한 평가 미흡
  -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유사사업이나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피드백 조치가 미흡
- 'ODA 통합평가지침'('09, 평가소위)을 바탕으로,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와 평가소위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자체평가) 각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총리실 평가소위에서 평가결과를 심의
  - (소위평가) 평가소위(총리실)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
    - \* 금년에 국별평가(캄보디아), 유무상 연계사업, 새마을 운동 시범평가중
- 평가결과를 대상사업의 후속조치 및 유사사업의 발굴·시행에 반영하도록 환류시스템을 제도화
  - \*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원조집행기관의 평가지침 개정
  - ① 평가결과 통보 → ② 피평가자가 교훈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팀에 제출 → ③ 평가팀은 평가결과 활용실태 점검
  - 신규사업 추진시 유사사업의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

□ 참여와 공개를 통해 국민적 지지와 평가의 객관성 제고

- 통합평가시 수원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원국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참여적 평가를 강화
- 평가보고서 공개범위 확대를 통해 원조사업의 책임성과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

< 통합평가 흐름 >



## 3-1

## 추진 필요성

- 다자원조는 양자원조와 함께 우리의 ODA를 구성하는 양축의 하나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
  - 다자기구내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선진 ODA 기법의 습득을 통해 우리의 원조 선진화에 기여
- 2010년 OECD/DAC 가입 및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HLF-4) 개최 등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제고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 우리의 ODA 확대계획에 따른 다자원조 규모의 확대에 따라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향 정립
  - 양자원조와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개발협력 활동의 이념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 강화
    - \* 단, 양자원조 기반은 미약하나 글로벌 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의 경우 다자원조를 통해 보완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활용,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있어 선진국/개도국 입장간 교량 역할 및 새로운 개발협력 규범 창출에 기여
-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 ODA 조달시장에 기업의 진출도 활성화하여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을 촉진할 필요

## 3-2 국제활동 참여 기본방향

### I. 목표

- ◇ 다자기구 협력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 및 기구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 II. 추진전략

- ①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추진
- ②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원조분업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 ③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

### III. 추진과제

- ①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강화
  - 원조규모 확대, 포괄적 원조전략 수립, 원조분업 확대
- ② 국제기구 진출 확대
  - 국제기구 국민 진출, 국제조달시장 기업 참여 등
- ③ 국제규범 준수 및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 ④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확대

### 3-3 국제활동 참여 강화방안

#### 1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강화

- ◇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추진
- ◇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 및 원조분업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 1) 다자원조 규모 및 구성

- (다자원조 규모) UN, MDB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규모는 선진공여국 수준에 비해 적으나, 양자원조간의 비율은 선진 공여국\*과 유사

\* 총 ODA중 다자지원 비율 : 한국 30.4%, OECD/DAC 평균 29.6%(07-09년 평균)

- ODA 규모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다자원조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양다자간 비율은 현행 비율을 지속 유지

- (다자원조 구성)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 등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MDB와 함께 ODA 분야 양대축인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비해 매우 미흡

구 분	06~08년 지원규모 평균(백만불)		UN 및 기타 : MDB
	UN 및 기타(EU 제외)	MDB	
DAC 평균	9,962	9,913	1 : 1
미국	1,592	1,164	1 : 0.7
일본	1,012	1,832	1 : 1.8
호주	119	224	1 : 1.9
덴마크	448	196	1 : 0.3
한국	59	134	1 : 2.3

☞ 재정부, 외교부에서 15년까지의 다자지원 확대계획 수립

## 2) 포괄적 다자원조 전략

◇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지원 규모·분야·방식 등을 포괄하는 다자원조 전략 수립

□ (중점분야) MDGs 달성, 기후변화·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원조와 보완적으로 활용

\* 양자차원의 접근이 힘든 취약국가나 인도지원 분야를 중점 지원

□ (분담금 납부체계) 의무분담금 및 ODA 일부 계상 사업분담금은 소관 부처, **ODA에 전액 계상되는 MDB 및 UN 산하 기구(사업)·기금의 사업분담금**은 해당 다자원조 주관기관 중심으로 납부

□ (관계부처 협의강화) UN·MDB간 기능 분담\* 및 UN·MDB간 공동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참여 및 협의 강화

\* MDB : 인프라구축 등 대형프로젝트, 경제정책 수립·이행지원 중심,  
UN : 보건·교육 등 사회개발, 개도국 역량개발, 거버넌스 구축 중심

\*\* 식량안보 등 UN과 MDB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코소보·아프가니스탄 등 국제분쟁 취약국가를 위한 원조공여체제 구축 등

□ (신탁기금 활용)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탁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 신탁기금 활용을 통해 우리 인력 및 기관의 국제기구 사업 참여기회 확대

□ (평가 강화) 기구별 거버넌스 논의 및 다자기구 평가 논의 (MOPAN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대상 기구의 집행이사국 진출 확대와 다자지원 효과성에 대한 평가 강화

☞ 재정부(MDB), 외교부(UN 등)에서 다자원조전략 수립



### 3)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유무상 통합 협력 강화) 주요 선진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협력체제 확대·강화
  - 다만, 과거와 같이 유무상 주관기관이 개별·중복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필요
    - \* (외교부) 일본, 영국, EU와 정례 ODA 정책협의회를 개최/추진중 (재정부)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등과 네트워크 구축 중
  - 정부간 협력협정 체결은 외교부를 통해 시행하고, **MOU**는 각 기관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체결
- (원조분업 참여 확대) 우리 지원 대상국중 선진 공여국의 원조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원조분업 실시
  - 현지 공여국 협의체 등 타 공여국과 공동지원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지원 사업에 **우리의 콘텐츠를 적극 반영**
    - \* 탄자니아에서 19개 공여국 및 국제기구간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 수립 및 정기적 정책대화 개최
    - \* 베트남에서 수은(EDCF), ADB, AFD, JICA, KfW, WB가 6 Banks를 구성·운영
  -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경제 인프라, 농업 등) 및 **지역**(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공동협력 사업\*** 강화
    - \* 일본과 아프간 및 캄보디아에서 공동협력사업 및 미국과 아프리카 지역 농촌개발사업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검토 중
-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MDB** 협조 용자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우리의 발전경험을 활용한 공동사업 및 컨설팅 등 추진
  - \* (EDCF) MDB 협조용자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 (KOICA) Millenium Village 사업 등 UN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중
  - \*\* 현재 WB, IDB, ADB, AfDB 등과 KSP 공동컨설팅 방안 검토 중이며, UNDP 정책센터('11년 서울 개소)와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계획

☞ 재정부, 외교부에서 선진공여국과 협력강화방안 마련

##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1) 국제기구 우리인력 진출 확대

□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진출규모 미흡

○ 해외인턴, 봉사, 조기유학 등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증가하면서 진출희망자가 크게 증가

\*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DB 등록인원은 7,776명(10.5월 기준)

○ 국제기구 진출이 91년 UN 가입당시 **17개 기구 139명** ⇒ **10년 50개 기구 34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국제기구 분담금 고려시 낮은 수준

\* UN : 우리 분담율(10년 2.26%, 11위)대비 전문직(P급)이상 진출규모 37위

\* 국제금융기구 : 우리평균지분(1.48%)에 크게 못미치는 0.7% 수준

□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실에 '국제기구 진출확대 실무 T/F'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전담부서 지정

○ 재정부(국제금융기구), 외교부(UN 및 산하기구), 각부처(소관 국제기구) 등 소관 부처별로 전담내부조직을 지정

\* 분야별 인재 POOL 관리, 국제기구 공식정보 수집, 진출희망자 컨설팅 등 수행

\* 국내대학, 연구소, 기업체와 국제기구간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제기구 소재 재외공관, 국제기구 근무자 및 채용담당자간 삼각협력체제 구축

□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확대 추진

○ 우리 경비로 국제기구에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확대

- 현재 5명인 JPO를 내년에 20명으로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증원
  - \* 한국과 재정기여도가 비슷한 네덜란드, 스페인의 JPO규모는 4-50명 수준
- 정규직 진출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본부배속을 확대하고 파견기간(1-2년)을 최대 3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 ○ ODA확대와 국제기구 진출 연계 강화

- ODA 확대에 따라 국제기구의 자발적 기여금과 신탁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부합하는 우리 국민 진출 확대
  - \* UN에 대한 의무분담률은 2.26%인 반면, UNDP, UNICEF, WFP 등 개발 관련 유엔 3대 기구에 대한 우리 기여액은 기구 전체 예산의 0.2%미만
- UN, MDB 등 의무분담금/출자금 대비 우리국민의 과소진출 문제는 국제기구 사무국과 적극적인 교섭 강화를 통해 개선

#### □ 국제기구의 진출응모 적격자의 저변을 확대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에 따라 국제기구 인턴 파견을 확대하고, UNV\*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현장경험 기회 확대
  - \* UNV(United Nations Volunteers) : 158개국 출신 자원봉사자 7,548명 활동중, 우리나라는 92년 이래 88명 파견
- UN의 여성인력 우대정책 등을 감안, 여성인력 진출 적극 지원
  - 국제기구 여성인턴제를 확대하고 국제여성인턴 유경험자 등으로 여성인재 POOL 구축, 적극홍보
-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정례화\* 및 초중고 및 대학의 글로벌 진로교육강화와 정부, 대학, 기업간 협력 증대
  - \* 금년에 국제기구(외교부 주관) 2회, 국제금융기구(재정부 주관) 2회 실시

☞ 재정부(MDB), 외교부(UN 등)에서 세부실행방안 수립

## 2) 국제 ODA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 국제사회의 ODA 규모 증가, 비구속성 원조확대 등으로 ODA 조달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진출수준은 저조

○ 조달시장 규모 : UN은 04년 65.2억불 ⇒ 07년 100.8억불이며, 5대 MDB\*는 04년 180억불 ⇒ 07년 236억불로 증가

\* WB, ADB, IDB, EBRD, AfDB

○ 우리기업 수주실적 : UN은 0.52억불(0.51%, 분담금 비중 2.1%), 5대 MDB는 약 0.8억불(0.34%, 분담금 비중 1.48%)

□ ODA 조달시장은 국내시장 포화에 따라 판매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는 우리기업에게 블루오션 영역이나 아직 진출에 어려움

○ ODA 조달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범정부차원의 통합적·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도 정보제공에 치중해 있는 상황

○ 위험 최소화를 위해 조달실적 업체를 선호하는 발주기관의 초기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업체 진출에 애로

\* 진입만 하면 지속적 거래가능성이 높아 수출 틈새시장으로 인기

\* 밴더 등록(6개월-1년 소요), 언어장벽, 발주기관별 상이한 조달절차 등

○ 아직 ODA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진출역량이 부족

- 대기업 :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적고 수익성이 높지 않아 무관심

- 중소기업 : 정보, 전문인력, 수주를 위한 자금조달 등 능력부재

※ 컨설팅 시장은 선진국이, 물품·시공 시장은 중국·인도 등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황에서 우리의 특성을 살린 방안 마련 필요

## □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정부역량 집중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ODA** 조달을 해외조달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 KOTRA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입찰정보, 벤더등록, 법률자문, 통역서비스 등에 대한 현지지원 강화

\* 미국(09.5, 워싱턴지사), UN(09.5, 뉴욕지사)

## □ 우리기업의 **ODA** 조달시장 접근성 강화

- 진출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현지 조달제도와 관행을 분석하여 '분야별·지역별 진출 매뉴얼' 마련
- 중기청·KOTRA·조달청·수출입은행·KOICA 등의 정보 전달 체계를 연계하고, 해외정부조달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
- 매년 관계기관 합동으로 **ODA** 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관심 유도

- 재정부, 외교부, KOTRA, 대한상의 등 개별기관의 설명회는 자율 개최

\* 설명회를 계기로 국제기구 조달부서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 □ 우리기업의 **ODA**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기업의 진출 실적(**Track Record**) 축적노력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이면서 후속계약 수주로 이어지는 개발 컨설팅 역량을 강화
- 국제기구 등 발주처와 연구소, 공기업간 지식, 인력 협력을 확대하여 조달시장의 발판 마련

\* 한국교통연구원 - ADB 교통사업 컨설팅 등

☞ 재정부(MDB), 외교부(UN 등)에서 세부실행방안 수립

### 3 국제원조규범 준수와 형성과정에 참여

◇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원조 규범을 충실이 이행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

#### 1) 국제원조 규범 준수

□ (UN의 규범) MDGs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되, 특히 실적이 저조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남아시아, \*\* 빈곤퇴치 · 보건 등

○ '02년 몬테레이 UN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원칙을 존중

□ (OECD DAC의 규범) '78년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고'\* 및 2001년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권고'\*\*내용 이행 필요

\* 평균증여율 최소한 86%,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 90% 이상, GNI대비 ODA 약정액 0.23% 이상 권고

\*\* 양자 비구속성 비율 : 12년까지 75%, 15년까지 DAC 평균규모(84.6%) 달성

○ 정책일관성\*, 역량배양, 성평등, 빈곤감소, 취약국 지원, 거버넌스 등 DAC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노력

\* 정책일관성: 원조 이외에 조세, 무역, 투자, 이민, 반부패, 기술접근 분야에서 개발협력 방향과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정책 시행

○ 파리선언(05년)과 아크라 행동계획(08년) 이행 필요

- '11년 파리선언 최종 모니터링 실시 및 '12년 OECD/DAC 동료검토 등에 대비, 이행 계획 점검 및 이행 가속화 노력

☞ 매년 재정부(유상) · 외교부(무상)에서 정기적으로 소관분야의 주요규범 준수실적을 평가하여 정부차원의 이행상황을 점검

## 2) 국제규범 형성과정 참여

- (국제회의 참여 원칙) 국제사회 개발협력관련 최고 협의체\* 논의에 유무상 기관 등 **ODA**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

\* OECD/DAC 고위급 회의,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MDGs 달성 검토 회의 등

- (규범형성 참여)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규범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

- 개발협력 관련 주요 국제회의\* 지침·결의·전략 등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

\* OECD/DAC회의, MDB 회의, 유엔 총회 및 개발기구 집행이사회 등

\*\*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실질적 개발 성공사례 도출 노력, 개도국의 주인의식, 자조노력 강조 등

-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HLF-4 회의**(‘11.11월)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방향 논의과정에 기여

- 외교부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HLF-4 기획단을 설치하고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안사항 조율

- (혁신적 재원발굴 노력) 비전통적인 개발재원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기존에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을 유지·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 검토

- 관련 논의(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회의) 적극 참여 및 우리의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 출국항공권에 기여금(1천원/장)을 부과, 매년 150여억원 조성하고 있는 개도국 질병퇴치 지원 목적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재정부, 외교부에서 국제규범형성관련 세부실행방안 수립

#### 4 인도적 지원 확대

□ 국제사회 재난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UN에 의하면 1975-2005년간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연평균 100건에서 400건으로 4배이상 증가

⇒ 우리나라도 OECD DAC 가입에 따라,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필요

\* 특히 아이티 지진피해('10.1월)를 계기로 우리정부의 긴급구호 선진화 필요성 대두

□ 긴급구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구호시스템을 개선

- '15년까지 ODA중 긴급구호 예산비중을 **OECD DAC 회원국 평균수준인 6%로 확대**

\* 09년 긴급구호예산은 95억원으로 0.87% 수준

- 대규모 재난 상황발생후 **24시간내**에 외교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긴급구호대 파견여부와 초기지원 규모결정

\* 72시간내 도착가능시 구조대를 적극 파견, 그 외에는 의료팀 위주로 파견

- 해외긴급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화된 인력과 긴급구호 장비 비축\*** 확대

\* 재난형태 · 지원분야 ·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및 보강, 소규모 이동식 병원, 통신장비 등 구조장비 및 긴급 구호품 확대 · 다양화

- 민간 구호기관, **NGO** 등의 현장 활동 지원 등 민관협력 강화

☞ 외교부에서 긴급구호시스템 세부 대책 마련



---

## V.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

---

- 1 국민적 공감대 확보
-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3 ODA 전문인력 양성



## 1 추진방향

-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ODA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방안 필요
  - 세계최초로 최빈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
  - 우리가 ODA를 지원받아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을 위해 개도국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 '15년까지 **ODA** 규모가 현재의 약 **3배**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제고
- ODA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와 함께 교육 필요

## 2 범정부적인 통합홍보체계 구축

-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로 분산 추진된 홍보활동을 통합하는 추진체계를 정립
-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ODA홍보 **T/F\*** 설치·운영
  - 각 부처의 홍보계획 및 홍보활동에 대한 조율·점검·조정, 홍보실적 종합평가 등 기능 수행

\* (T/F 구성) 총리실, 주관기관(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

### 3 유무상 통합홍보 추진

-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ODA 홍보대사 및 홍보단 구성·운영**
  - \* 현재 KOICA는 홍보대사와 대외원조홍보단을 구성 · 활동중
- 한국의 **ODA**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합 **BI**도입
  - 각 기관은 통합 BI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Identity를 통일하고, 필요시 자체 BI 병기 허용
- 유무상 및 각 시행기관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통합 ODA 홈페이지(odakorea.go.kr)**' 구축 및 운영

### 4 대상별 맞춤형 홍보·교육 추진

- **(초중고) 초중고 교과서에 ODA의 기본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다양한 ODA 학습 보충교재를 발간
  - 글짓기, 견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체험학습 강화
    - \*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지리과목)에 반영
    - \* KOICA에서 초중고용 교재 '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발간 · 보급
- **(주요대학) ODA관련 교과과정, 단기캠프, 특강을 개설하고 정책간담회, 세미나 개최를 적극 지원**
  - 주요 대학원의 강좌개설 지원 및 대학의 전공기초 과목 개설 확대
    - \* 연세대 · 숙대여대 등 29개 대학에 전공기초(교양과목) 개설 확대
- **(일반국민) ODA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場을 마련**
  - 정부 · 민간(학계 · NGO · 기업 등) 합동 '**ODA 박람회**' 개최
  - ODA에 대한 사진공모 · 전시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 ODA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KOICA)** 활성화 등

☞ 재정부, 외교부의 분야별 홍보계획을 총리실에서 종합 · 추진

## 1 NGO와의 협력 확대

□ **(현황)** 개발협력 NGO는 현장성·전문성을 토대로 OD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참여 저조

- UN에 등재된 NGO는 3천개가 넘지만 한국은 23개에 불과
- NGO 사업 지원예산은 현 KOICA 협력사업비의 2% 수준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대비 NGO 예산비율(08년)은 평균 3.7%)

\* 더구나, 사업매칭비율은 80%이상이나 우리나라는 60% 수준에 그침

- 효과적인 ODA를 위한 정부-NGO간 실질적 협력이 미흡

\* 영국은 BOND(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를 통해 협의

□ **(추진방안)**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

- NGO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사업비를 '15년까지 **10배** 수준 확대, NGO 사업비 대비 정부 보조금 비중도 '**12년까지 80%로 연차별 확대** (간접비 지원 비중도 확대)

- NGO사업과 ODA의 연계를 위해 NGO 주관으로 NGO 현황 및 사업에 대한 통계관리체제 구축(해원협과 협의)

- ODA 전 과정에 걸쳐 **NGO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현지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 발굴단계에서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안 마련(시범사업실시)

- NGO와 정부기관사이의 **협의채널**을 구축(세미나 등 개최)

□ NGO의 재정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NGO 지원 예산 중 역량강화사업 비중 확대**

- NGO 사업실시, 자금관리, 홍보 및 조직운영 분야 교육 확대
  - \* KOICA ODA 교육원 전문교육 과정 지속 강화
- NGO 관계자 연수, 연구, 세미나 개최 지원

○ **NGO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학습 장려**

- 국제 NGO 및 현지 NGO와의 협력 사업 및 국내 NGO간의 공동 사업에 가점 부여
  - \* 소규모 신생 NGO의 경우, 경험 많은 여타 NGO와의 공동사업 장려

○ **현지 정보 제공 강화**

- KOICA 해외사무소 개설지를 중심으로 현지 법률·제도 등 기초정보 매뉴얼 발간
- 현지 우수 사업 발굴 및 정보 제공

□ NGO 지원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 재외공관(또는 KOICA 해외사무소)을 통한 현장 관리 강화

- 재외공관 주도의 현지 협의체 참여하여 지원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점 등 보고

○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 2 민간 기업과의 협력확대

□ (현황) 기업의 OD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기업간 네트워크 등 협력시스템이 미흡하고, 기업의 참여도 저조

- ODA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PPP)\*도 초기단계
  -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공여국은 투자 이전에 기술협력(TA) 등을 실시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재원\*\*확충

\* 2010년 KOICA의 PPP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의 0.26% 수준(10억)

\*\* WB의 다자간 협력기금(PPIAF), 영국의 도전기금(Challenge Fund), 캐나다의 혁신기금 (Innovation Fund) 등 운영

□ (추진방안) 기업이 개발협력의 주체이자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및 지원방안을 강구

- 관련 국내기업 협의체, 글로벌 기업 및 국제 NGO와 연계,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에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상생(Win-Win)관계 구축

\* Gates 재단(정책자문, 농업, 백신 분야 협력), 유엔 글로벌 컴팩트(UNGC) 참여

\* 공동 세미나, 워크숍 및 공청회 등 개최

- PPP 사업에 대한 예산확대를 검토하고 내년도에 협력모형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

- 연수,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등 기존 협력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예시) 병원설립+운영, 학교설립+공단설립 연계, 농촌개발+농산물가공단지 운영, 인프라개발(도로·철도)+지역개발참여 등

- ODA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연계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채널 구축

### 3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 (현황) 전문성 · 인적자원 · 시설 및 인프라 등을 통해 ODA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여기회나 협력체제는 미흡
  - 대 학 : KOICA, EDCF의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연구에 큰 관심
    - 그러나, 아직 ODA 사업분야에 대한 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시스템이 구축이 미흡한 실정
    - \* 학생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아직 참여 기회가 적은 편
  - 연구기관 : 여러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ODA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나,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는 미흡
- (추진방안) ODA 정책개발 및 사업발굴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학과 연구기관을 'Think Tank'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대학 및 연구소별로 전문분야 · 대상국가 · 거점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구협력 체제 구축
  - 정부의 ODA 관련 연구조사\*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참여시켜 전문가로 활용
  - \* 개발경험의 정리와 전수, CAS 수립, 타당성 조사, 평가 등(개발컨설팅 산업의 확대)
  - 대학 · 연구소-NGO-정부기관(KOICA, EDCF 등)의 인적 · 물적 교류 활성화, 이론과 실재가 결합된 연구성과 도출 유도

☞ NGO 등과의 협력을 위한 재정부, 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을 총리실에서 종합 · 추진



## 1 추진 필요성

◇ ODA 규모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체계적 전문 인력 관리 미흡

□ (인력 공급 측면) 대학이나 대학원 정규교과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이나 퇴직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개발협력 전문가 과정은 일부 국제대학원\*에서 개설되어 있으나, 교수 구성 및 내용 등은 부족한 실정임

\* 14개 국제대학원 입학정원은 1,164명('09)이나, 일부 대학에서만 개발협력과정을 두고 있는 실정

○ 각 분야 전문기술 보유자도 ODA에 대한 기본지식만 전수하면 **ODA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나, 교육훈련 시스템 미흡

\* KOICA에서 ODA 교육원을 개설('10.3)하여 운영중

○ ODA 경험이 있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

\* KOICA(2,622명) 및 EDCF(2,433명)의 인력 Pool을 운영 중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의 폭도 제한적

\* KOICA의 봉사단, NGO 봉사단, 파견 전문가(ODA 파견자, 국제기구 파견자)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인력 수요 측면) **ODA 규모가 약 3배 확대**되고, 기업들의 ODA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면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

- 향후 **KOICA, EDCF**의 기능강화와 함께 청년과 퇴직자에 대한 ODA 프로그램\*도 증가 추세

\*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World Friends Korea, 퇴직자 활용 프로그램 (지경부 퇴직전문가 파견사업, 외교부 종장기자문단, 재정부 KSP 자문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기술협력 등을 위한 **개발컨설팅 산업**은 유망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흡

\* 주요국은 국제개발컨설팅 회사가 활발하게 활동(일본 50여개, 영국 250여개, 캐나다 600여개, 미국 1,000여개 활동)하고 있어서, ODA 인력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여건이 용이함

-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기구, 개발협력 NGO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 2 ODA 전문인력 양성 방안

- KOICA 및 EDCF를 중심으로 국별 전문가, 분야별 컨설턴트, 해외경험자(봉사단 및 파견자) 등 체계적인 인력 **Pool** 구축

- Junior 및 Senior 전문가, 지역전문가, 조사 및 평가 전문가, 교육·보건의료·ICT·엔지니어 등 분야별 전문가 등

\* 일본의 경우, 전문가의 유형(기술이전형/조정형)을 나누고, 국제협력 전문원, 특별자문원, 기획조사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민간전문가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세미나·연수 강화

- ODA 시장을 국내·외로 나누어 각각 노동공급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

- 국내 **ODA 사업의 확대** 및 **국제기구의 진출**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ODA 시장에 대한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 ODA 사업의 선진화와 관련, **국별전문가, 컨설턴트, 학생, 퇴직자**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 **(국별전문가)** 연구기관, 대학의 지역연구, 민간기관, NGO 등을 연계하여 연구 활성화
  - **(컨설턴트)** 개발 및 타당성조사, 개발경험 전수, 사업실행, 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육성
  - **(학 생)** 국제대학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되, World Friends Korea, 인턴제도 등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퇴직자)** 퇴직자에 대한 분야별 pool을 구축하고, ODA 교육 등을 거쳐, 기술협력·정책자문요원으로 활용
  
-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NGO, 기업 등 **ODA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기관관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유관 기관과 교류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 주관기관(재정부, 외교부 등) 및 실행기관(EDCF, KOICA) 사이의 인적 교류 확대 등 모색
  
- 국내 **컨설팅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수요창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ODA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모색
  - 컨설팅 분야를 확대하여 ODA 경험 축적(비구속화 대비, 사업준비자금 확대 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부, 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을 총리실에서 종합·추진**



---

## VI. 향후 조치계획

---



## ① 금년중 분야별 계획 수립·추진

- ☐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유상(재정부), 무상(외교부) 분야별 기본계획(5년단위)을 수립
-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유상(재정부), 무상(외교부) 분야별 시행계획(1년단위)을 수립

## ② 내년부터 『ODA 선진화 방안』을 본격 추진

- ☐ 내년부터 ODA 각종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이견사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율